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타당성 연구

- 5개 일간지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 민 규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타당성 연구

- 5개 일간지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우 지 숙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김 민 규

김민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 원 장 전 영 한 (인)

부위원장 이 수 영 (인)

위 원 우 지 숙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5개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이다. 타당성은 보도 기사 전체문장 대비 사실문장 비율을 나타내는 '사실문장비율'과 기사에 인용된 '정보원수 비율'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로 측정하였다.

연구 주제는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언론사에 따라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가' 이다. 5개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대강살리기사업'관련 보도한 기사 중 448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ANOVA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사에 따라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언론 보도의 논조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가'이다. 앞서 임의 추출한 448개 보도 기사를 논조별로(긍정, 중립, 부정) 분류하고 타당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논조에 따라서는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 번째 주제는, '사업시기 및 정부 변화에 따라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가' 이다. 건설 사업 진행 공정을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기간(사업전, 2008년~2009년)과 건설 기간(사업중, 2010년~2012년), 그리고 건설 사업 이후(사업후 2013년~2015년)로 나누고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변화(이명박 정부 2008년~2012년, 박근혜 정부 2013년~2015년)에 따라 타당성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 시기에 따라서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는 '사실문장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갈등적 이슈였던 '4대강살리기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보도 기사가 언론사에 따라, 사업 시기에 따라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언론사별, 논조별, 사업시기별 타당성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한정되어 있어, 타당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언론보도, 보도기사, 타당성, 4대강살리기사업
학　번 : 2016-24410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5
제 1 절 이론적 배경 ····· 5
1. 언론보도와 정부정책 ····· 5
2. 언론보도와 여론형성 ····· 9
3. 언론보도의 타당성 ····· 11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14
1. 언론보도의 사실타당성에 대한 선행연구 ····· 14
2. 언론보도의 정보원(취재원)에 대한 선행연구 ····· 16
3. 선행연구 검토결과 및 시사점 ····· 18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1
제 1 절 연구 문제 ····· 21
제 2 절 연구 방법 ····· 23
1. 연구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23
2. 코더간 신뢰도 검증 ····· 27

제 4 장 분석 결과 ····· 28
제 1 절 분석 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 28
제 2 절 언론사에 따른 보도기사의 타당성 분석 ····· 34
제 3 절 보도기사의 논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 38
제 4 절 사업추진 시기에 따른 타당성 분석 ····· 47
1. 사업 시기에 따른 타당성 분석 ····· 47
2. 정부 변화에 따른 타당성 분석 ····· 56

제 5 장 결론 ····· 65
제 1 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65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 ····· 68

참고문헌 ····· 70
부 록(분석대상 보도기사 목록) ····· 75
Abstract ····· 93

표 목차

<표 1> 언론사별, 사업 시기별 분석 대상 데이터 수 ····· 24
<표 2> 언론보도의 타당성 측정 방법 ····· 25
<표 3> 분석 집단 구분 및 기준 ····· 26
<표 4> 분석 대상 언론 보도기사의 기술통계량 ····· 28
<표 5> 보도 논조에 대한 분석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 30
<표 6> 사업시기별 분석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 31
<표 7> 정부별 분석 대상 언론보도의 기술 통계량 ····· 32
<표 8> 구성 항목간 상관관계 ····· 33
<표 9> 언론사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 34
<표 10> 언론사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35
<표 11> 언론사에 따른 '정보원의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35
<표 12> 언론사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36
<표 13> 언론사에 따른 '익명 정보원의 진술수'
분산분석 결과 ····· 36
<표 14> 언론보도 논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 38
<표 15>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 39
<표 16> 언론보도 논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40

<표 17>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41
<표 18>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42
<표 19> 언론보도 논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43
<표 20>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44
<표 21>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45
<표 22> 사업시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 47
<표 23>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 48
<표 24> 사업시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49
<표 25>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50
<표 26>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51
<표 27> 사업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52
<표 28>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53
<표 29>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 54

<표 30> 정부 변화 따른 '사실문장비율'
t-test 결과 ····· 56
<표 31> 언론사별 정부 변화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t-test 결과 ····· 57
<표 32> 정부 변화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 58
<표 33> 언론사별 정부 변화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t-test 결과 ····· 59
<표 34> 언론사별 정부 변화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 60
<표 35> 정부 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 61
<표 36> 언론사별 정부 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t-test 결과 ····· 62
<표 37> 언론사별 정부 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 63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분석대상 언론보도 기사량의 변화 ····· 29
<그림 2> 언론사별 분석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 2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007년 12월,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대운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논란 끝에 2008년 6월 '한반도대운하' 공약은 철회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에 이상 기후에 대비한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는 제방 보강, 준설, 보 설치, 댐 건설, 하천 둔치 수변공간 조성 등으로 국가 하천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내용으로 약 22조가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었다. 2009년 4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그 해 6월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환경성평가 등이 마무리 되면서, 2009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준설, 보 건설 등의 토목 사업이 시작되었다. 준설사업은 2011년 12월, 보 건설은 2011년 7월, 생태하천 및 자전거도로는 2012년 11월에 마무리가 되었다(국토해양부, 2012).

4대강살리기사업은 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과 시민·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불러왔다. 또 다른 '대운하사업'이 아니냐는 의심과 환경단체와의 갈등 등,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논란은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여론전의 형태로 사업 초기부터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전에 대한 분석 연구로, 윤순진·이동하(2010)와 박기수(2011)의 프레임 연구가 있다. 윤순진·이동하(2010)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KBS, MBC의 9시 TV 메인 뉴스 내용을 분석을 통해, 언론이 4대강살리기사업을 '대운하사업인지 아닌지' 찬반 논란 프레임으로 유도하면서 주요 논란 사항을 배제·축소하고 사안을 여·야간 정쟁

사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사업관련 의제를 설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기수(2011)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를 대상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를 통해, 언론사의 이념 성향에 따라 기사 유형, 보도 프레임, 기사성향, 인용취재원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아일보는 권위주의 및 성장・효율성 프레임으로, 한국일보는 민주합의・균형 프레임 등으로, 경향신문은 대항, 비난 프레임 등으로 보도 기사가 구성되었으며, 논조 역시 동아일보는 긍정 기사가 68.23%, 경향신문은 84.91%, 한국일보는 긍정과 중립이 각 22.68%, 39.69%가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취재원 인용시 언론사 성향에 맞는 취재원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언론이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는 가에 따라 뉴스를 접하는 수용자의 태도 및 여론의 변화가 발생한다(Entman, 1993; 이준웅, 2005).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보도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태도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보도 기사의 진술적 언행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연구이다(이준웅, 2010). 보도 기사의 타당성이란,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주장이 확인 가능한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여부를 말한다(이준웅・김경모, 2008). 즉 보도기사가 얼마나 검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가를 의미한다. '타당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김현강(2016)은 보도 기사가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실성(객관성)'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최영재・홍성구(2004)는 언론의 객관성이란 진실 보도를 추구하는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타당성과 관련하여 박형준(2013)은 방송 기자들이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는 사실성'을 기사 작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현강(2016)과 최영재・홍성구(2004), 박형준(2013)은 공통적으로 보도 기사의 타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실의 적시'를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실의 적시'와 같은 개념의 사실타당성을 '사실문장비율'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보도기사의 타당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정보원'의 활용이다. 정보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그 진술을 보도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연계 된다(박재영・이완수, 2007). 또한 명확한 취재원의 활용은 뉴스보도의 신뢰성,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최진호・곽은아・한동섭(2016). 이번 연구에서도 타당성 구성의 한 요소인 '정보원'이 어떻게 활용 되었는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언론보도는 정부정책과 여론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박기묵, 2015; 이준웅, 1997). 이러한 언론 보도의 품질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타당성이다(이준웅, 2008). 높은 타당성을 가진 보도 기사는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정부정책과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이번 연구의 주제는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보도 기사가 언론사에 따라, 보도 기사의 논조에 따라, 사업 시기 및 정부변화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경향성이 다른 국내 주요 5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4대강살리기사업을 주제로 하는 보도 기사 중 임의 추출 방식으로 분석 대상 기사 448건을 선정하여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도 기사 중 단순 언급, 사설, 칼럼, 투고 등 언론사의 주관성이 강한 기사는 제외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사실타당성', '정보원의 타당성'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하였다. '사실타당성'은 보도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얼마만큼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여부로 전체 문장수 대비 사실문장수의 비율로 측정하였고, '정보원 타당성'은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실명 정

보원수의 비율과 실명 정보원이 언급한 진술수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또한 보도 기사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수의 비율과 익명 정보원 진술수의 비율도 함께 측정하여 타당성 해석에 참고하였다.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ANOVA분산분석 및 t-test를 사용하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언론보도의 타당성 연구를 위해, 언론에 대한 기존 이론 연구를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언론보도와 정부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양 자의 관계를 이론을 보면서 언론 보도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정책은 정치인, 관료가 주체가 되어 결정 집행하기 때문에 언론과 정부(정치)와의 관계도 포함하였다. 둘째, 언론보도가 여론형성에 관한 이론이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언론보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지 기존 이론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언론보도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 주제인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보고자 한다. 언론보도에서 타당성이 가지는 의미와 정확한 정의, 그리고 객관성, 공정성 등 유사한 개념, 익명 정보원이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언론보도와 정부정책

언론과 정부(정치)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관계를 도식화 하면 크게 세 가지 연구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언론에 영향을 준다는 정부 우위 모델이다. 언론권력보다 정부권력의 힘이 강하여 정부권력의 이익에 따라 언론이 좌우되는 관계를 말한다. 둘째 언론이 정부에 영향을 준다는 언론 우위 모델이다.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언론이 강한 권력주체로 정부에 영향을 준다는 관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는 언론과 정부가 상호 영향을 준다는 모델로 이 모델은 다시 언

론과 정부가 상호 도움을 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언론, 정부가 개별 주체로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경쟁하는 관계인지로 세분화 할 수 있다(유재천, 2003; 최경진 2013).

첫 번째 모델은 정부(정치)가 언론에 영향을 준다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유재천(2003)은 민주화되기 이전 한국사회는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으로 정부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언론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를 가졌다고 설명한다. 정치적으로 후진 상태에 있던 한국사회에서 언론은 정부권력을 위한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선전도구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남재일(2006)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언론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민주화 이전에는 정부권력의 우위가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언론과 정부의 관계 연구도 정부의 언론정책이 주 관심사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부의 언론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청와대 출입 기자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밝혔다. 민주화 이전에는 언론은 정부의 정책홍보를 위한 일방적인 관계였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오히려 언론은 청와대와 자발적인 유착관계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언론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경진(2003)도 민주화 이전에는 정부가 언론에 대해 일방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후 민주화 초기 언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발생한 소수 신문의 독점(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전체 신문시장의 70%를 차지)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방송의 위상의 문제와 지역 언론의 문제도 함께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의 상호침투를 통한 언론개혁을 제시하였다.

박승관・장경섭(2000)은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부는 언론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관계였지만, 언론도 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점과 일정 언론의 독립성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정부-언론은 억압과 복종관계 이기도 하였지만, 연대-담합의 연대체계의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사회는 정부(정치)가 언론에 일방적인 영향을 갖는 관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언론사를 억압하거나 회유, 또는 담합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양자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 민주화 이후 변화된 관계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간 차이가 있다. 유재천(2003)은 언론과 정부가 적대와 일체라는 극단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보았고, 남재일(2006)은 민주화 초기에는 정부 친화적이었다가 비판적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최경진(2003)은 민주화 이후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박승관・장경섭(2000) 민주화 이후 언론권력이 강화되면서 언론사가 배타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모델은 언론의 정부에 대한 영향 모델에 대한 논의다. 박승관・장경섭(2001)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강력한 국가통제가 이완되면서 언론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지며, 언론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사 권력기관으로 언론 권력은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부(정치)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권력이 강해진 이유를 민주화 이후 정부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그 공백을 언론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기관의 정상화를 제시하고 있다. 문종대(1997)는 정부권력은 투표시장에서의 이익 극대화하려고 하고, 언론권력은 언론시장(수용자)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로 보고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정부권력은 정책을 통해 투표시장에서 승리하려 하는데, 언론은 이익집단을 통해 정책에 대한 정보를 낮은 비용으로 획득, 활용하기 때문에 언론권력이 정부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한다. 즉, 언론이 정책을 어떻게 포장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력 가지기 때문에, 언론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기묵(2015)은 언론이 공공의제 설정 기능에 의해 정부정책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언론에 의해 선택된 의제는 개인과 여

론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은영・성석주・최봉기(2009)는 울산시 실증 사례 연구를 통해 언론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언론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이유로 민주화 이후 정부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그 반대 급부로 언론권력이 강해졌다는 설명과(박승관・장경섭, 2001), 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유권자에 전달하는 의제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정부에 대해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문종대, 1997; 박기묵 2015; 정은영・성석주・최봉기, 2009).

세 번째 모델은 언론과 정부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모델이다. 최용주(1996)는 언론체계와 정치체계의 관계를 상호침투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언론의 정치과정 침투를 '정치의 미디어화'라 하며, 언론체계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침투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체계 역시 언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하며, 이를 '언론의 도구화'로 표현했다. '정치의 미디어화'와 '언론의 도구화'는 상호교환관계, 규범적 적대관계, 실제적 적대관계, 상호포함관계를 통해 상호 침투하여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서영남・박종민(2008)은 우리나라 언론중재 제도를 매개로 언론과 정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언론중재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합법적・제도적 방법인 언론중재의 이용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노무현정부에서는 각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언론중재를 이용하여 이용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언론과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통해 언론을 견제하려는 정부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욱・임유진(2009)은 언론과 정부 양자의 관계는 언론의 경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보수언론은 적대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진보언론은 비판도 하였지만 중립적・옹호적 입장도 혼재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수언론은 침묵을, 진보

언론은 적대적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 황상재・정연구・박성순・홍성민(2012)은 정부홍보담당자와 언론인의 인식 비교를 통해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정부홍보담당자는 현 시점은 복합적 관계이지만, 바람직한 관계는 국익에 대한 언론의 협조적 관계라 인식하는 반면에, 언론인은 현 시점은 정부홍보담당자와 동일하게 복합적 관계이지만, 바람직한 관계는 정부에 대한 언론의 견제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언론과 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체계에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보거나(최용주, 1996), 민주화 이후 강력한 힘을 가진 언론에 대해 정부는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견제하려는 갈등 관계로 보는 시각(서영남・박종민, 2008)이 있으며, 언론의 경향성과 정부 성격에 따라 양자의 관계가 변한다고 보는 연구가 있다(김영욱・임유진, 2009).

2. 언론보도와 여론형성

언론 보도와 여론형성과의 관계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되어 왔던 주제다. 이와 관련 주요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점화효과 이론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이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이 그 사안에 대해 보도를 하여 공론화 할 경우, 개인의 의견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고화 된다는 심리적 기제를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송현주(2006)는 뉴스매체의 보도가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점화효과가 작동 여부를 분석하였다. 실험대상자를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뉴스와 부정적 뉴스를 읽은 후 변화가 발생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전에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실험대상자는 긍정 뉴스를 읽은 후 더욱 긍정적으로 되었다(점화효과 발생). 하지만 대통령에 긍정적인 실험대상

자가 부정적 뉴스를 읽는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점화효과 미발생). 즉 대통령에 대한 기존 감정과 유사한 보도는 점화효과가 있지만 그 반대는 점화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의제설정이론이다. 앞서 언론보도와 정부정책과의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은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언론의 의제설정이 효과는 효과가 발휘되는 영역에 따라 미디어 의제설정, 공중 의제설정, 정책적 의제설정으로 구분한다(이준웅, 2001). 장하용(1997)은 논설 기사에서 다루는 주제가 의제설정 기능을 하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디어 의제설정 이론을 바탕으로 여론 형성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1995년 1년 동안 9대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에 실린 사설 기사를 6개 단위(6일간) 기간으로 나누어 707개 기사에 대해 여론 형성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위 기간 동안 사설에서 다룬 주제의 공유도를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평균 38.28%의 공유도가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중심도는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중심에는 경향, 서울, 세계, 한국, 국민이 주변부에는 한겨레, 조선, 동아, 중앙이 위치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성태・이영환(2006)은 미디어 의제설정기능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연구하였다.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의 차이점을 파급효과와 상호성으로 보고, 황우석 사건 등 10건의 사례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 미디어는 의제설정에서 차이가 있으며, 인터넷의 새로운 의제설정 기능으로 의제파급(Agenda-Rippling)과 역의제설정(Reversed Agenda-Setting) 개념을 제시했다. 의제파급은 인터넷 미디어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파급 속성을 말하는 것이며, 역의제설정은 기존 미디어가 공중에 의제를 설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온라인상 의제가 기존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셋째, 프레이밍 효과이론이다. 이준웅(2001)은 뉴스 프레임 구성 방식이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뉴스 프레임이 이슈 해석과 의견 형성에 중요한 효과를 유발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뉴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가에 따라 수용자의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적 이슈일수록 언론보도의 양보다는 뉴스 프레임의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준웅, 2005). 나은경・송현주・김현석・이준웅(2008)은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르게 프레이밍 한 뉴스 보도가 뉴스수용자에게 차별적인 정서를 유발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기사 중 취업률이 하락 관련 뉴스를 다르게 프레이밍 하여 354명의 실험대상자가 읽고 나서 가지는 정서적 반응을 관측했다. 연구결과는 서로 다른 뉴스 프레이밍은 전체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개별 정서를 유발한다는 결론를 도출하였다.

3. 언론보도의 타당성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타당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의 공정성의 개념 연구는 다양하다. 이준웅(2005)은 공정한 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언론의 객관성,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개념을 비판하며, 비판적 담론을 보완한 담론의 공정성을 제시한다. 기존의 객관성 개념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윤리학적 의미의 '객관성'의 논리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 중립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해 중립성은 불개입을 내포하고 있고, 불편부당성은 균형을 하위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언론은 불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립성 보다는 불편부당성을 선택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균형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 문제는 균형은 양자가 받아들 수 있는

공통의 합의 기준점인데 현실의 상황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균형 기준은 선택되지 못하고 다시 편파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편파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담론의 공정성'을 제안한다. 담론의 공정성은 담론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주장이 언론 보도에 반영되도록 문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판적 담론 공중과 성격이 다르다. 비판적 담론 공중들의 등장은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등장과 유사하다(하버마스, 1962)며, 우리나라의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해 등장하였다고 한다. 기존세력에 대한 도전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담론'적인 이유는 스스로 공론장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중들은 정체성이 파편화 되어 있고 유대성도 약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담론 규칙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한다. 비판적 담론 공중의 한계를 벗어나 담론의 공정성을 제안한다, 담론을 구성하는 정치적·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는 주체가 정당하게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은 민주적 담론 질서가 확립된 공론장의 역할의 수행이 언론의 공정성이라 제시하고 있다.

담론의 공정성에 대해, 김현강(2016)은 공정성(fairness)의 개념이 객관성(objectivity)에서 유래하여 사실성(factuality)와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개념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정의(justice)와의 연관성을 인식하면서 이준웅(2005)의 '담론의 공정성'으로 공정성 개념을 설명한다. 한국의 언론이 담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의 정치적 독립', '형식적 공정성의 해소', '객관성과 의견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객관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김상호(2007)는 과거 저널리즘은 사건(event)에 대해 오로지 일어난 사실(fact)만 보도하는 것이 객관성을 지키는 실천 과제로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만으로는 뉴스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객관성은 개개인과 분리할 수 없는 가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석적 틀로서의 객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언론의 객관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뉴스의 객관성 개념에 추가적으로 상대성을 인정하고, 맥락에서 공동체의 상호 합의와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성을 의미한다.

이준웅(2010)은 사실과 의견의 분리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과 가치'는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하는 '언론의 사실과 의견의 분리' 역시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보도기사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주장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참에 대한 타당성'과 '옳음에 대한 타당성'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전자는 언론의 '진술적 언행'으로 후자는 '규범적 언행'의 차원으로 나누어 상호 다른 기준으로(정당화하는 내용과 절차가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언론 보도의 타당성이 등장하게 된다. 스트레이트 기사(진술적 언행)는 사실을 윤색할 경우 타당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의 전달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의견 기사(규범적 언행)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근거의 제시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언론 규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타당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준웅・김경모(2008)는 언론보도의 타당성은 보도 기사의 주장이 검증가능한 근거로 부터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다. 바림직한 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보도, 검증보도, 진정보도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한다. 정확성과 타당성, 적절성이 바탕이 되어 뉴스가 작성되면 품질 높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뉴스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실을 바탕이 되는 사회적 담론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적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 '공정성'은 기존의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시작된 불편부당성을 넘어 민주적 논의가 반영되는 담론의 공정성을 말하며(이준웅, 2005), '객관성'은 과거 사실(fact)만 보도 하는 것을 벗어나 공동체의 상호 합의에 의한 객관성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현강, 2016).

‘타당성’은 진술적 언행의 측면과 규범적 언행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술적 언행에서의 타당성 기준은 ‘검증가능성’, 규범적 언행에서의 타당성의 기준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이준웅, 2010).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익명 정보원 활용을 들 수 있다. 이준웅・김경모(2008)의 타당성 개념에 의하면 익명 정보원은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 이광재(1995)는 취재원 익명보도가 언론매체의 불신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기자는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익명을 전제로 하더라도 보도를 한다고 한다. 대부분 익명의 사용은 취재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 사용에 관한 규범을 제안하고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언론보도의 사실타당성에 대한 선행연구

언론보도의 사실 타당성 연구는 타당성만을 단일 주제로 수행된 연구보다는 객관성, 공정성 등과 함께 언론 연구의 하나의 주요 요소로 나타난다. 이완수・박재영(2013)의 방송뉴스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연구와 이상률・이준웅(2014)의 프레임경쟁기에 따른 언론보도 전략 연구를 선행연구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이완수・박재영(2013)은 방송 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기사문장 단위 분석을 통해 방송 저널리즘 규범에 얼마나 충실한지 연구하였다. 연구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KBS, MBC, SBS의 저녁 메인 뉴스 중 840개 리포트 표본을 추출하여, 보도에 사용된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나누고 기준에 따라 코딩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객관성 수준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토대정보의 신뢰성’, ‘실명 및 익명 취재원

수', '제목과 본문의 직접인용구 일치도', '무주체 주관적 술어 문장수'를 설정하고, 공정성 수준을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전체 문장수', '비사전적 조어', '가치 개입적인 차별적 표현수', '과잉어휘수'로 설정하였다. 코딩 유목으로 '토대정보의 신뢰성'은 개별 보도 전체에 대해 근거가 제시되는지 여부, '제목과 본문의 직접인용구 일치도'는 제목이 내용에 있는지 여부, '과잉 어휘수'는 극단적으로 표현된 어휘수를 말한다. 분석결과 '토대정보의 신뢰성'은 전체기사의 96.7%로 나타났다. 뉴스 1개 당 실명취재원수는 2.03명, 익명취재원수는 .66명이었다. '제목 본문 직접인용구 일치도'는 55.1%, '인용구 주관적 술어 수'는 .59, '무주체 주관적 술어 문장수'는 .53, '전체 문장수'는 10.41, '비사전적 조어' .13, '가치 개입적 차별적 표현수' .04, '과잉어휘수' .06 였다. 연구 결과, 방송 뉴스에 사용되는 언어는 부분적으로 보도 규범에 충실했지만, 가치개입적인 표현과 극단적 묘사 등이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객관성, 공정성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률・이준웅(2014)은 이슈적 사안인 검・경 수사권 논쟁에 대한 프레임 분석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의 전략을 보도 기사의 타당성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로 검・경 수사권 갈등을 뉴스에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 했느냐와 프레임 경쟁 양상은 어떠했는가로 설정하여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고,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기사 타당성 확보 경쟁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검・경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사는 방어적 차원에서 익명 정보원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프레임 경쟁 시기의 언론사 전략으로 익명 정보원 사용 빈도도 함께 연구하였다.

분석 기간과 대상은 조현오 경창청장의 발언에 의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1년 5월 26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인 2012년 12월 19일 까지 설정하고, 전국 종합일간지 10개지에서 관련 기사 254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프레임구성을 위한 자료 분석은 주제진술문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제진술문 출현빈도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프레임 경쟁기, 프레임 균형기, 프레임 지배기, 프레임 쇠퇴기로

명명했다. 기사의 타당성은 기사의 주장이 확인 가능한 근거에 의존하여 합리적으로 도출되었지를 기준으로 사실타당성은 전체 기사 문장 대비 사실 문장수, 정보원 수, 정보원 진술수로 측정하였다. 프레임 분석결과 프레임은 경쟁기, 균형기, 지배기, 균형기, 쇠퇴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기별 사실문장비율, 정보원수, 정보원 진술수, 익명 정보원수, 익명 정보원 진술수를 ANOVA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 결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4개의 프레임(밥그릇, 견제와 균형, 국민 인권, 수사 지휘)을 도출하였으며, 프레임 경쟁기에 정보원수 및 정보원 진술수가 높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경쟁기에는 각 이익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기 위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원을 제공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사실타당성 역시 갈등이 최고조 시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익명 정보원 활용은 프레임 경쟁시기와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종합하면 프레임 경쟁시기에는 언론이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공론장의 기능이 수행하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타당성 수준은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언론보도의 정보원(취재원)에 대한 선행연구

본 언론보도 타당성 연구에서는 정보원과 익명 정보원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원(취재원)에 대한 기존 연구 중 박재영・이완수(2007)의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비교연구와 최진호・곽은아・한동섭(2016)의 취재원 활용에 있어 전국언론과 지방언론 비교 연구, 한동섭・유승현(2008)의 익명 정보원 연구를 선행연구로 검토하였다.

박재영・이완수(2007)는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韓美간 신문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다. 연구는 보도 기사에서 인용과 취재원적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실증적 분석하여 보도 기사 작성의 준칙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인용과 취재원 적시 규범에 대한 비교를 통해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였다. 익명취재원 사용빈도, 인용구 사용빈도 비교 등을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韓美 5개 신문사(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7년도 기간 중 한국신문 352개 기사, 미국신문 223개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분석은 익명취재원, 인용구, 무주체 수동태 문장 등 항목을 나누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익명취재원은 한국은 .59개, 미국은 .53개 였다. 韓美 신문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신문별 차이는 유의미 했지만, 시기별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미국 신문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하여 결과를 얻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한미 신문 모두 인용과 취재원 적시가 규범에 따라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미국 신문에 비해 한국 신문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진호・곽은아・한동섭(2016)은 원전 마피아 사건을 대상으로 취재원 활용에 있어 전국언론과 지방언론의 차이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였다. 연구문제는 사건보도에 나타난 취재원의 유형과 명시성, 인용방식은 지역과 미디어 유형에 따라 차별성이 있는가로 설정하고, 2013년 5월 28이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KBS, MBC, SBS, KNN, UBC(울산방송)에서 다룬 보도기사 201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유목은 취재원 유형, 명시성, 인용방식으로 하고, 카이스퀘어 검증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취재원 유형에서 전국언론은 공적기관, 전문가로 지역언론은 공적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차이가 있으며, 취재원 명시성에서는 신문이 방송에 비해 익명취재원이 많았으며, 취재원 인용방식에서는 간접인용에서 지역언론(29%)이 전국언론(7%) 보다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동섭・유승현(2008)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목적은 언론사의 내재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익명 정보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

석하는 것이다. 분석은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392개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언론사는 성향에 따라 상이한 보도태도를 나타냈으며 익명 정보원은 전체 정보원중 40.4%를 나타냈다. 취재원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관계자, 한겨레신문은 일반시민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명 정보원의 진술이 기사 내용에서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3. 선행연구 검토결과 및 시사점

이완수・박재영(2013)의 연구는 방송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중파 3사(KBS, MBC, SBS)의 메인뉴스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객관성과 공정성 측정을 위해 10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데이터를 분석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객관성의 기준의 하나로 '실명 취재원 수'와 '익명 취재원 수'를 사용하였다. 이완수・박재영(2013)의 연구와 이상률・이준웅(2014)의 보도 기사 타당성 측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방송 뉴스와 신문 기사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두 연구의 측정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방송뉴스의 객관성 측정을 위한 '토대 정보의 신뢰성'과 신문 보도 기사 측정을 위한 '사실타당성' 이다. 차이의 원인은 두 연구의 실증 연구 이전에 언급한 이론연구에서 객관성과 타당성의 정의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이완수・박재영(2013)은 뉴스의 객관성을 기자의 개인적 평가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토대 정보의 신뢰성'을 측정 항목으로 설정하고 그 의미를 방송 보도 기사 첫 문장에서 나타나는 종결어미의 형태로 전체 기사의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종결어미가 '~의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표현되더라도 의혹 제기의 주체가

실명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면 확인된 정보로 코딩을 하였다. 즉 믿을 수 있는 보도 기사로 분류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완수・박재영(2013) 논문의 아쉬운 점을 찾을 수 있다. 위의 방식대로 코딩한 결과 '토대 정보의 신뢰성'은 평균 96.7% 결과 값이 나왔다. 100개의 보도 뉴스 가운데 97개는 신뢰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소 아쉬운 결과다. 반면 이상률・이준웅(2014)의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기사가 제시하는 주장이 검증 가능한 근거에서 도출되었는가로 정의하면서, '사실타당성'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사실문장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이상률・이준웅(2014)의 연구는 갈등적 이슈에 대해 프레임 분석과 함께 타당성과 익명 정보원 사용을 분석하였다. 검・경수사권 갈등에 대해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경쟁기, 균형기, 지배기, 쇠퇴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타당성의 차이를 측정하여, 프레임 경쟁기에 보도 기사의 타당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로 부터 보도 기사의 사실타당성 분석을 위한 세부 측정 항목 설정과 측정 방법에 대해 참고 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분석대상을 전국종합일간지 10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언론사별과 언론사별 논조에 따른 타당성 차이도 추가로 분석하였다면 타당성 연구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정보원 타당성' 측정 항목을 정보원 수와 정보원 진술 수 측정보다 이를 전체문장 대비 비율로 측정하였다면 측정 방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영・이완수(2007)의 연구는 인용과 취재원을 주제로 한미 간 인용 취재원 적시 규범 및 실태를 비교 분석 연구하며, 규범에 따른 보도 기사의 인용과 취재원 활용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최진호・곽은아・한동섭(2016)은 취재원 활용에 있어 전국언론과 지방언론의 차이와 방송뉴스와 신문기사의 차이를 분석하며, 취재원 활용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동섭・유승현(2008)의 연구는 익명 정보원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슈적 사안에 대한 보도기사가 익명 정보원을 근거로 사용하는 실태를 분석하였다. 위 취재원 관련 선행논문을

통해 정보원에 대한 측정 방법과 정보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등을 본 연구에 참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정보원의 진술수도 함께 분석하여 정보원 수와 결과를 비교하였으면 보도 기사에서의 정보원 사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언론보도의 타당성이 언론사별, 보도 기사 논조별, 시기별, 정부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이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슈가 갈등적 성격이 강할수록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는 정책과 여론 형성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타당성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이상률・이준웅, 2014). ‘4대강살리기사업’ 역시 갈등적 성격이 강한 이슈로,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보도 기사에 대해, 진술적 측면의 타당성이 언론사별 차이, 논조의 차이, 사업 추진 시기, 정부의 변화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연구문제는 3가지로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1.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언론사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1은 언론사에 따른 언론보도의 타당성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다. 5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기사를 임의 추출하여 언론사별로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 보도 타당성은 ‘사실문장비율’,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로 항목을 구분하여 측정할 예정이다.

연구문제 2.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언론보도 논조의 차이(긍정/중립/부정)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는 언론 보도 논조에 따른 타당성 차이 연구다. 보도 기사를 논조에 따라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누고, 논조의 차이에 따라 보도의 타당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보도 기사의 논조에 따라 언론사 구분 없이 언론 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언론사별로 구분하여 보도 기사의 논조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논조에 따른 타당성 차이 연구 역시 '사실문장비율',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 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로 항목을 구분하여 측정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사업 추진 시기(사업전/사업중/사업후) 및 정부의 변화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은 '4대강살리기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의 기간 동안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언론 보도의 타당성에 변화가 있는지 분석한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사업 초기(2008년~2009년, 이번 연구에서는 사업시기를 3가지 시기로 나누었다. 본격적인 건설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의미에서 '사업전'으로 표기)와 사업 중기(2009년~2012년,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로 '사업중'으로 표기), 그리고 건설 사업이 마무리 된 사업 후기(2013년~ 2015년, '사업후'로 표기)로 나누어 언론 보도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타당성과 박근혜 정부에서의 언론보도의 타당성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 문제2와 마찬가지로 언론사 구분 없이 언론 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언론사별로 구분하여 보도 기사의 논조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타당성 차이 연구 역시'사실 문장비율',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로 항목을 구분하여 측정할 예정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 데이터 및 분석 방법

이번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4대강살리사업' 관련 보도 기사를 임의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5개 언론사는 언론사의 경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모집단은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개 언론사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4대강살리기사업', '4대강', '4대강사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구성하였다. 검색 결과 5,477건의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보도 기사가 검색되었다. 언론사별로 조선일보 857건, 중앙일보 515건, 한국일보 653건, 한겨레신문 1790건, 경향신문 1662건이 검색되었다.

5,477건의 모집단을 언론사별로 보도 일자 순으로 나열한 후 계통적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448건(8.17%)을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보도기사 선정 시, '4대강살리기사업'이 단순하게 언급된 보도 기사와 논설, 칼럼, 투고 등 주관성이 강한 기사는 제외하였다.

<표 1>은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량이다. 언론사별 추출 건수의 차이는 언론사별 모집단 수의 차이에 기인한다.

<표 1> 언론사별, 사업 시기별 분석 대상 데이터 수 (단위: 연도, 건)

구 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계
2008	7	6	7	9	7	38
2009	9	8	8	20	13	58
2010	22	11	13	52	34	132
2011	7	4	8	14	12	45
2012	10	6	8	12	10	46
2013	14	9	14	17	16	70
2014	6	4	5	10	9	34
2015	4	4	4	6	7	25
계	79	52	67	140	110	448

이번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사실타당성과 정보원 제공의 타당성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실타당성은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얼마나 제시하고 있는가'로 정의하고, 보도 기사의 전체 문장의 수 대비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 문장의 수의 비율로 코딩하였다. 사실 문장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하였다.

정보원 제공의 타당성은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원이 얼마만큼 인용되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실명으로 언급된 정보원의 수와 정보원의 진술이 직접 인용된 문장수가 몇 개인지 측정하여 전체 문장수 대비 비율로 코딩하였다. 익명 정보원은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기사의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이준웅, 2008), 이번 연구에서는 보도 기사의 타당성 해석을 돕기 위해 '익명 정보원수 비율'과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도 같은 방법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표 2>는 언론보도 타당성 측정 방법이다.

<표 2> 언론보도 타당성 측정방법

구 분	측정 방법
사 실 타당성	▪ 사실 문장수의 비율 (사실 문장수 / 전체 문장수) ※ 사실문장 :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 여부의 검증이 가능한 문장
정보원 타당성	▪ 정보원 수의 비율(정보원 수 / 전체 문장수) ▪ 정보원 진술 문장수의 비율(정보원 진술 문장수 / 전체 문장수) ※ 익명정보원 수의 비율, 익명정보원 진술 문장수 비율도 같은 방법을 사용

아래는 보도 기사에 대한 코딩 예시이다.

제목 : 尹환경 4대강 洑 때문에 녹조 더 나타나 (조선일보 2013.8.8)

4대강·녹조 관계 없다던 MB정부 입장 뒤집어

①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녹조(綠潮) 현상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중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②지난 정부가 줄곧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던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의 인과관계를 현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③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장관은 국무회의 업무 보고에서 "녹조는 수온, 영양물질, 물의 정체(停滯)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洑·댐) 때문에 녹조가 더 나타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④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로 야권(野圈)과 환경단체 측에서 제기해왔다. ⑤8월 초 현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 ⑥특히 낙동강은 중·하류 전 구간에 걸쳐 녹조 현상이 발생했으며 확산 추세에 있다. ⑦윤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온 편이라 7월 기준으로 녹조 수준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분의 1 내지 9분의 1 수준이지만 앞으로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면 악화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정하 전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녹조 원인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건 무리"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4대강 검증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위 기사의 총 문장수는 8개이다. 사실 문장수는 3개(④,⑤,⑥)로 사실문장비율은 .375이다. 정보원 수는 1명으로 정보원수 비율은 .125(⑧)이며, 정보원 진술수는 1문장으로 비율은 1.125(⑧)이다. 익명 정보원은 2명으로 .25(③)이며, 익명 정보원 진술 문장수(③,⑦)는 2개로 .25로 코딩하였다.

분석 방법은 선정된 보도 기사 분석은 ANOVA분산분석과 t-test 를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Scheffe, Dunnett T3)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3>은 분석 집단에 대한 정리다. 연구문제1에 따라 집단을 언론사별로 나누었으며, 연구문제2를 위해 논조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연구문제3과 관련하여 사업 시기와 정부변화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 분석 집단 구분 및 기준

구 분	분석 집단 구분 및 기준
언 론 사 (연구문제1)	5개 일간지 (5개 집단)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논 조 (연구문제2)	언론 보도 논조에 따라 분석 집단 구분 (3개 집단) : 긍정적 기사, 중립적 기사, 부정적 기사
사업시기 (연구문제3)	사업 진행 시점 (3개 집단) : 사업전('08～'09), 사업중('10～'12), 사업후('13～'15)
정 부 별 (연구문제3)	정부별 (2개 집단) : 이명박정부('08～'12), 박근혜정부('13～'15)

2. 코더간 신뢰도 검증

코더간의 신뢰도는 분석 대상 기사의 10% 기사(45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본 연구자가 코딩한 결과와 석사과정생 1명의 코딩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코헨스 카파(Cohen's kappa)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평균 .828을 얻었다. 항목별로는 '사실문장비율' .788, '정보원 수' .963, '정보원 진술수' .846, '익명 정보원수' .797, '익명 정보원 진술수' .808, '논조' .766 을 나타내었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분석 대상 언론보도 기사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는 5개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보도한 '4대강살리기사업'관련 보도 기사 중 임의 추출한 448건의 기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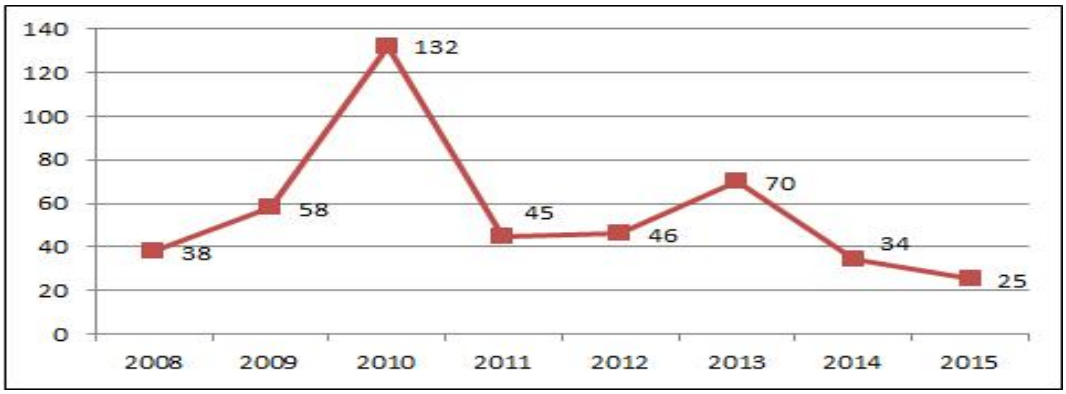
<표 4>는 분석대상 보도 기사의 언론사와 시기별 기술통계량이다.

<표 4> 분석 대상 언론 보도기사의 기술통계량 (단위: 년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조선 일보	7 (1.6%)	9 (2.0%)	22 (4.9%)	7 (1.6%)	10 (2.2%)	14 (3.1%)	6 (1.3%)	4 (.9%)	79 (17.6%)
중앙 일보	6 (1.3%)	8 (1.8%)	11 (2.5%)	4 (.9%)	6 (1.3%)	9 (2.0%)	4 (.9%)	4 (.9%)	52 (11.6%)
한국 일보	7 (1.6%)	8 (1.8%)	13 (2.9%)	8 (1.8%)	8 (1.8%)	14 (3.1%)	5 (1.1%)	4 (.9%)	67 (15.0%)
한겨레 신문	9 (2.0%)	20 (4.5%)	52 (11.6%)	14 (3.1%)	12 (2.7%)	17 (3.8%)	10 (2.2%)	6 (1.3%)	140 (31.3%)
경향 신문	9 (2.0%)	13 (2.9%)	34 (7.6%)	12 (2.7%)	10 (2.2%)	16 (3.6%)	9 (2.0%)	7 (1.6%)	110 (24.6%)
계	38 (8.5%)	58 (12.9%)	132 (29.5%)	45 (10.0%)	46 (10.3%)	70 (15.6%)	34 (7.6%)	25 (5.6%)	4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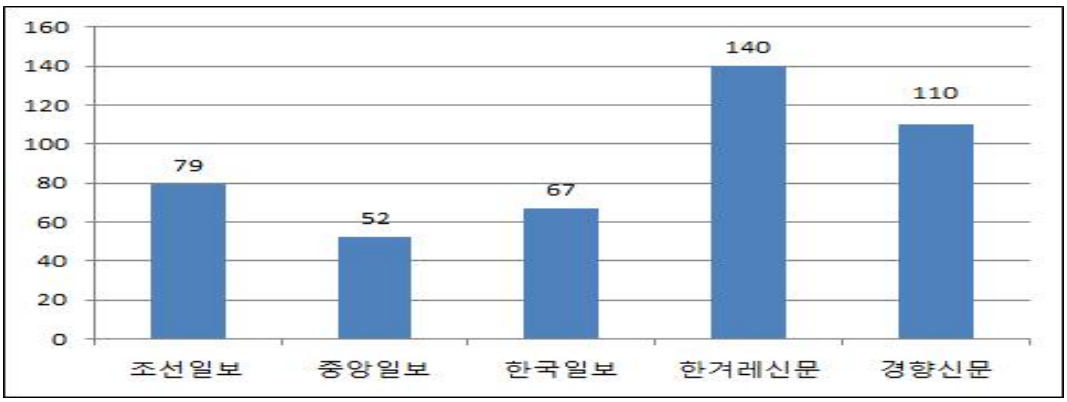
<그림 1>은 연도별 분석대상 기사량의 변화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2009년 6월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 플랜'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0년에 사업 관련 기사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건설 사업이 준공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 소폭 증가하였고,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분석대상 언론보도 기사량의 변화 (단위: 년도, 건)



언론사별 분석데이터 수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사별 분석 대상 기사 수의 차이는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모집단 기사량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2> 언론사별 분석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단위: 건)



<표 5>는 보도 기사를 논조별로 분석한 것이다. 언론사별 보도 기사의 논조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긍정적 기사가 40.6%, 중립적 기사가 31.6%, 부정적 기사가 27.8% 로 분석되었으며, 중앙일보는 긍정적 기사가 38.5%, 중립적 기사가 28.8%, 부정적 기사 32.7%로 나타났다. 보수적 언론사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긍정, 중립, 부정적 보도 기사가 비율이 고르게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긍정적 기사는 11.9%, 중립적 기사는 31.3%, 부정적 기사는 56.7%로 분석되어, 부정적 기사가 절반을 약간 넘었다. 진보적 언론사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한겨레신문은 중립적 기사는 12.1%, 부정적 기사는 87.9% 이며, 경향신문은 중립적 기사가 12.7%, 부정적 기사가 87.3%로 분석되었다. 이는 박기수(2011)의 연구에서 경향신문의 부정적 기사가 84.91%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표 5> 보도논조에 대한 분석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단위 : 건)

구 분	긍 정	중 립	부 정	계
조선일보	32 (40.6%)	25 (31.6%)	22 (27.8%)	79 (100%)
중앙일보	20 (38.5%)	15 (28.8%)	17 (32.7%)	52 (100%)
한국일보	8 (11.9%)	21 (31.3%)	38 (56.7%)	67 (100%)
한겨레신문	0 (0%)	17 (12.1%)	123 (87.9%)	140 (100%)
경향신문	0 (0%)	14 (12.7%)	96 (87.3%)	110 (100%)
계	60 (13.4%)	92 (20.5%)	296 (66.1%)	448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시기별 분석 대상 보도 기사량은 본격적인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2010년부터 2012년에 49.8% 비율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사업초기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21.4%, 사업 후반기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율 수준은 언론사의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기간의 구분은 본격적인 건설사업 추진 기간(2010년~2012년)을 '사업중'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인 2008년부터 2009년은 '사업전', 2013년부터 2015년은 '사업후'로 구분하였다.

<표 6> 사업시기별 분석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단위 : 건)

구 분	사업전 ('08~'09)	사업중 ('10~'12)	사업후 ('13~'15)	계
조선일보	16 (20.2%)	39 (49.4%)	24 (30.4%)	79 (100%)
중앙일보	14 (26.9%)	21 (40.4%)	17 (32.7%)	52 (100%)
한국일보	15 (22.4%)	29 (43.3%)	23 (34.3%)	67 (100%)
한겨레신문	29 (20.7%)	78 (55.7%)	33 (23.6%)	140 (100%)
경향신문	22 (20.0%)	56 (50.9%)	32 (29.1%)	110 (100%)
계	96 (21.4%)	223 (49.8%)	129 (28.8%)	448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별 분석 대상 언론보도의 수는 약 7:3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명박정부 시기(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석대상 기사의 비율은 71.2%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근혜정부 시기(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8.8%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비율 역시 언론사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표 7> 정부별 분석 대상 언론보도의 기술통계량 (단위 : 건)

구 분	이명박 정부 ('08~'12)	박근혜 정부 ('13~'15)	계
조선일보	55 (69.6%)	24 (30.4%)	79 (100%)
중앙일보	35 (67.3%)	17 (32.7%)	52 (100%)
한국일보	44 (65.7%)	23 (34.3%)	67 (100%)
한겨레신문	107 (76.4%)	33 (23.6%)	140 (100%)
경향신문	78 (70.9%)	32 (29.1%)	110 (100%)
계	319 (71.2%)	129 (28.8%)	448

<표 8>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될 데이터의 구성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표다. 사실문장 비율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486)가 있고, 정보원수 비율과 익명정보원수 비율 간에도 음의 상관관계(-.306)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원수 비율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정보원 비율과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간에는 강한 양의 관계가 있다.

<표 8> 구성 항목간 상관관계 (n=448)

항목 단위	평균	표준편차	항목 단위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사실문장 비율	.470	.197	1.00				
2. 정보원수 비율	.114	.117	-.342**	1.00			
3. 정보원 진술수 비율	.190	.203	-.486**	.743**	1.00		
4. 익명 정보원수 비율	.064	.080	.036	-.306**	-.347**	1.00	
5.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088	.118	-.008	-.345**	-.373**	.849**	1.00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제 2 절 언론사에 따른 보도기사의 타당성 분석

연구문제 1은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언론사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다. 언론사에 따라 보도기사의 타당성은 앞서 연구방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문장비율', '정보원 수와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 수와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사에 따른 사실문장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언론사별로 경향신문의 사실문장비율이 .504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한겨레신문은 .498, 조선일보는 .473, 중앙일보는 .456, 한국일보는 .364 순으로 나타났다. '사실문장비율' 항목에서는 언론사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언론사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언론사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 검증
사실문장 비율	조선일보(a)	79	.473	.183	6.754 / .000**	a, d, e > c (scheffe 검증)
	중앙일보(b)	52	.456	.199		
	한국일보(c)	67	.363	.228		
	한겨레신문(d)	140	.498	.192		
	경향신문(e)	110	.504	.172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사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는 언론사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 10> 언론사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언론사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 검증
정보원수 비율	조선일보(a)	79	.089	.134	2.670 / .032*	유의미한 값 없음
	중앙일보(b)	52	.135	.126		
	한국일보(c)	67	.144	.125		
	한겨레신문(d)	140	.114	.105		
	경향신문(e)	110	.102	.105		

* P < .05 , ** P < .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사에 따른 '정보원의 진술수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 11> 언론사에 따른 '정보원의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언론사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 검증
정보원 진술수 비율	조선일보(a)	79	.182	.267	4.500 / .001**	c > d, e (Dunnett T3 검증)
	중앙일보(b)	52	.212	.220		
	한국일보(c)	67	.278	.232		
	한겨레신문(d)	140	.165	.152		
	경향신문(e)	110	.162	.160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12>는 언론사별 '익명 정보원수 비율'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2> 언론사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언론사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 검증
익명 정보원수 비율	조선일보(a)	79	.095	.099	6.433 / .000**	a > b, e d > b (Dunnett T3 검증)
	중앙일보(b)	52	.029	.055		
	한국일보(c)	67	.053	.081		
	한겨레신문(d)	140	.071	.079		
	경향신문(e)	110	.057	.066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13>은 언론사별 '익명 정보원의 진술수 비율'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3> 언론사에 따른 '익명 정보원의 진술수'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언론사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 검증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조선일보(a)	79	.129	.138	4.927 / .000**	a, d > b (Dunnett T3 검증)
	중앙일보(b)	52	.040	.089		
	한국일보(c)	67	.088	.139		
	한겨레신문(d)	140	.092	.109		
	경향신문(e)	110	.078	.102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의수준 .05에서 언론사별로 전체 항목에서 타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실문장비율 항목에서는 경향신문 .504, 한겨레신문 .498, 조선일보 .473, 중앙일보 .456, 한국일보 .363 순으로 결과 값이 나타났다(P=.000). 정보원수 비율 항목에서도 언론사별 차이가 나타났다(P=.032). 한국일보가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선일보가 .0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보원 진술수 비율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한국일보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향신문이 .162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한국일보의 데이터이다. 사실문장비율 항목과 정보원수 비율항목, 정보원 진술수 비율 항목에서 차이는 한국일보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사후검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일보의 경우 사실문장비율이 타 신문사에 비해 낮은 반면(.363), 정보원수 비율 항목(.144)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 항목(.278)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구성 항목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8>에서 나타난 사실문장 비율과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익명 정보원수 비율과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익명 정보원수 비율 P=.000,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P=.000).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 조선일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조선일보 익명 정보원수 비율 .095,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129).

일반적으로 한국일보는 중립적 경향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언론의 객관성'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편부당성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찬반의 양쪽 의견을 다 언급하는 형식으로 표출되게 된다(이준웅, 2005). 한국일보의 경우 정보원 진술의 비율이 타 언론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데, 이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사의 기사 작성 규칙의 차이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 3 절 보도기사의 논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문제 2는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언론보도 논조의 차이(긍정/중립/부정)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이다. 즉, 보도기사의 논조의 차이에 따라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여부이다. 분석대상 전체 보도 기사의 논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과 각 언론사별 논조에 따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는 전체 분석 대상 보도기사(448건)에 대해 논조의 차이에 따른 '사실문장비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분산 분석결과 P값은 .253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유의수준 .05에서 논조의 차이에 따라 '사실문장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술통계량을 볼 때 긍정적 논조의 보도기사는 60건으로 '사실문장비율'은 .446이다. 중립적 논조의 보도기사는 92건으로 그 값은 .450이다. 부정적 논조의 보도는 296건이며 값은 .481이 나타났다.

<표 14> 언론보도 논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보도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사실문장 비율	긍정(a)	60	.446	.225	1.379 / .253	-
	중립(b)	92	.450	.200		
	부정(c)	296	.481	.190		

<표 15>는 각 언론사별로 논조의 차이에 따른 '사실문장비율'이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개별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논조의 차이에 따라 보도 기사의 '사실문장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수준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308, 중앙일보 P=.430, 한국일보 P=.897, 한겨레신문 P=.687, 경향신문 P=.652).

<표 15>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기사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긍정(a)	32	.487	.203	1.194 / .308	-
	중립(b)	25	.427	.149		
	부정(c)	22	.509	.184		
중앙일보	긍정(a)	20	.410	.241	.858 / .430	-
	중립(b)	15	.477	.165		
	부정(c)	17	.491	.172		
한국일보	긍정(a)	8	.370	.265	.109 / .897	-
	중립(b)	21	.381	.253		
	부정(c)	38	.352	.212		
한겨레 신문	긍정(a)	-	-	-	.163 / .687	-
	중립(b)	17	.515	.247		
	부정(c)	123	.495	.184		
경향신문	긍정(a)	-	-	-	.205 / .652	-
	중립(b)	14	.484	.141		
	부정(c)	96	.507	.177		

<표 16>은 전체 분석대상 보도기사에 대해 논조의 차이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유의 수준 .05에서 '정보원수 비율'은 보도 기사 논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137). '정보원수 비율' 항목에서 긍정적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88, 중립적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26, 부정적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15을 나타내었다.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분석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P=.289). 긍정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79, 중립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219, 부정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83을 나타내었다.

<표 16> 언론보도 논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보도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정보원수 비율	긍정(a)	60	.088	.120	1.994 / .137	-
	중립(b)	92	.126	.142		
	부정(c)	296	.115	.107		
정보원 진술수 비율	긍정(a)	60	.179	.241	1.246 / .289	-
	중립(b)	92	.219	.233		
	부정(c)	296	.183	.183		

<표 17>은 각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논조의 차이에 따라 보도 기사의 '정보원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조선일보 P=.070, 중앙일보 P=.605, 한국일보 P=.502, 한겨레신문 P=.782, 경향신문 P=.609).

<표 17>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보도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긍정(a)	32	.050	.075	2.749 / .070	-
	중립(b)	25	.131	.182		
	부정(c)	22	.099	.127		
중앙일보	긍정(a)	20	.120	.109	.508 / .605	-
	중립(b)	15	.163	.177		
	부정(c)	17	.129	.092		
한국일보	긍정(a)	8	.160	.221	.697 / .502	-
	중립(b)	21	.117	.130		
	부정(c)	38	.155	.094		
한겨레 신문	긍정(a)	-	-	-	.077 / .782	-
	중립(b)	17	.107	.089		
	부정(c)	123	.115	.107		
경향신문	긍정(a)	-	-	-	.264 / .609	-
	중립(b)	14	.116	.093		
	부정(c)	96	.100	.107		

<표 18>은 각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논조의 차이에 따라 보도 기사의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641, 중앙일보 P=.732, 한국일보 P=.504, 한겨레신문 P=.197, 경향신문 P=.713).

<표 18>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보도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긍정(a)	32	.147	.259	.447 / .641	-
	중립(b)	25	.206	.274		
	부정(c)	22	.205	.278		
중앙일보	긍정(a)	20	.216	.224	.314 / .732	-
	중립(b)	15	.243	.254		
	부정(c)	17	.181	.192		
한국일보	긍정(a)	8	.212	.217	.693 / .504	-
	중립(b)	21	.254	.256		
	부정(c)	38	.305	.223		
한겨레 신문	긍정(a)	-	-	-	1.680 / .197	-
	중립(b)	17	.210	.192		
	부정(c)	123	.159	.146		
경향신문	긍정(a)	-	-	-	.136 / .713	-
	중립(b)	14	.177	.145		
	부정(c)	96	.160	.163		

<표 19>는 전체 분석대상 보도기사에 대해 논조의 차이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과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익명 정보원수 비율' 항목에서 긍정적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56, 중립적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804, 부정적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814 로 나타났으며, P값은 .525 이다. 유의 수준 .05에서 '익명 정보원수 비율'는 보도 기사 논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긍정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72, 중립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04, 부정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87이며 P값은 .260이다. 분석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9> 언론보도 논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보도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익명 정보원수 비율	긍정(a)	60	.056	.076	.646 / .525	-
	중립(b)	92	.071	.090		
	부정(c)	296	.064	.078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긍정(a)	60	.072	.102	1.350 / .260	-
	중립(b)	92	.104	.132		
	부정(c)	296	.087	.116		

<표 20>은 각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논조의 차이에 따라 보도 기사의 '익명 정보원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494, 중앙일보 P=.497, 한국일보 P=.718, 한겨레신문 P=.599, 경향신문 P=.640).

<표 20>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보도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긍정(a)	32	.079	.075	.711 / .494	-
	중립(b)	25	.108	.117		
	부정(c)	22	.103	.107		
중앙일보	긍정(a)	20	.018	.043	.709 / .497	-
	중립(b)	15	.034	.056		
	부정(c)	17	.039	.065		
한국일보	긍정(a)	8	.064	.107	.334 / .718	-
	중립(b)	21	.062	.093		
	부정(c)	38	.045	.070		
한겨레 신문	긍정(a)	-	-	-	.278 / .599	-
	중립(b)	17	.081	.070		
	부정(c)	123	.070	.081		
경향신문	긍정(a)	-	-	-	.220 / .640	-
	중립(b)	14	.049	.056		
	부정(c)	96	.058	.067		

<표 21>은 각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논조의 차이에 따라 보도 기사의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249, 중앙일보 P=.348, 한국일보 P=.684, 한겨레신문 P=.711, 경향신문 P=.597)

<표 21> 언론사별 기사 논조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보도 논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긍정(a)	32	.098	.111	1.416 / .249	-
	중립(b)	25	.152	.145		
	부정(c)	22	.149	.160		
중앙일보	긍정(a)	20	.018	.043	1.079 / .348	-
	중립(b)	15	.060	.131		
	부정(c)	17	.049	.083		
한국일보	긍정(a)	8	.105	.128	.382 / .684	-
	중립(b)	21	.105	.157		
	부정(c)	38	.075	.132		
한겨레 신문	긍정(a)	-	-	-	.138 / .711	-
	중립(b)	17	.101	.097		
	부정(c)	123	.090	.111		
경향신문	긍정(a)	-	-	-	.282 / .597	-
	중립(b)	14	.064	.084		
	부정(c)	96	0.80	.105		

종합하면, 연구문제2 인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언론보도의 논조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실문장비율',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5가지 항목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수적이며, 한국일보는 중립적,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은 진보적인 언론사로 분류한다. 이번 연구에서 언론사별 기사 논조 비율도 이러한 분류를 뒷받침 한다. '4대강살리기사업'관련 보도 기사에서는 논조에 따라 타당성의 차이가 없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언론보도와 여론형성에 있어 '점화효과 이론'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점화효과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같은 논조를 가진 보도 기사를 접할 때 기존의 생각이 더욱 강화되고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4대강살리기사업'관련 언론 보도에서 점화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는 언론 보도의 사실타당성, 정보원 타당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은 이번 연구문제 2 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 줄 수 있다.

제 4 절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문제3은 '사업추진 시기(사업전/사업중/사업후)와 정부 변화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다. 분석 대상 전체 보도 기사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각 언론사별로 구분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업 시기에 따른 타당성 분석

<표 22>는 전체 분석대상 보도기사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결과이다. '사업전' 보도 기사는 96건으로 '사실문장비율'의 값은 .382이다. '사업중' 보도기사는 223건으로 그 값은 .490이다. '사업후' 보도 기사는 296건이며 값은 .500이다. 분산 분석 결과 P값은 .000이 도출되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사업시기에 따라 '사실문장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2> 사업시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사실문장 비율	사업전(a) ('08~'09)	96	.382	.191	12.731 / .000**	b, c > a (Scheffe 검증)
	사업중(b) ('10~'12)	223	.490	.195		
	사업후(c) ('13~'15)	129	.500	.189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23>은 각 언론사별로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사업 시기에 따라 보도 기사의 '사실문장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440, 중앙일보 P=.467, 한국일보 P=.002, 한겨레신문 P=.008, 경향신문 P=.113)

<표 23>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사업전(a) ('08~'09)	16	.427	.158	.830 / .440	-
	사업중(b) ('10~'12)	39	.496	.191		
	사업후(c) ('13~'15)	24	.465	.185		
중앙일보	사업전(a) ('08~'09)	14	.400	.209	.773 / .467	-
	사업중(b) ('10~'12)	21	.469	.217		
	사업후(c) ('13~'15)	17	.485	.169		
한국일보	사업전(a) ('08~'09)	15	.192	.152	6.930 / .002**	b, c > a (Scheffe 검증)
	사업중(b) ('10~'12)	29	.386	.230		
	사업후(c) ('13~'15)	23	.447	.216		
한겨레 신문	사업전(a) ('08~'09)	29	.400	.185	5.019 / .008**	b, c > a (Scheffe 검증)
	사업중(b) ('10~'12)	78	.521	.174		
	사업후(c) ('13~'15)	33	.528	.214		
경향신문	사업전(a) ('08~'09)	22	.444	.166	2.222 / .113	-
	사업중(b) ('10~'12)	56	.504	.183		
	사업후(c) ('13~'15)	32	.544	.148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24>는 전체 분석 대상 보도 기사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와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정보원수 비율' 항목에서 '사업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42, '사업중'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09, '사업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02로 나타났으며, P값은 .026 이다. 유의 수준 .05에서 '정보원 진술수 비율'은 보도 기사 논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사업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241, '사업중'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79, '사업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71이며 P값은 .020이다. 분석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4> 사업시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정보원수 비율	사업전(a) ('08~'09)	96	.142	.139	3.679 / .026*	유의미한 값 없음
	사업중(b) ('10~'12)	223	.109	.109		
	사업후(c) ('13~'15)	129	.102	.110		
정보원 진술수 비율	사업전(a) ('08~'09)	96	.241	.229	3.942 / .020*	a > b, c (Dunnett T3 검증)
	사업중(b) ('10~'12)	223	.179	.193		
	사업후(c) ('13~'15)	129	.171	.194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25>는 각 언론사별로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사업 시기에 따라 보도 기사의 '정보원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경향신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148, 중앙일보 P=.606, 한국일보 P=.085, 한겨레신문 P=.138, 경향신문 P=.029)

<표 25>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사업전(a) ('08~'09)	16	.080	.098	1.961 / .148	-
	사업중(b) ('10~'12)	39	.066	.099		
	사업후(c) ('13~'15)	24	.134	.189		
중앙일보	사업전(a) ('08~'09)	14	.157	.091	.507 / .606	-
	사업중(b) ('10~'12)	21	.114	.152		
	사업전(a) ('08~'09)	17	.144	.119		
한국일보	사업전(a) ('08~'09)	15	.199	.185	2.566 / .085	-
	사업중(b) ('10~'12)	29	.144	.118		
	사업후(c) ('13~'15)	23	.107	.062		
한겨레 신문	사업전(a) ('08~'09)	29	.143	.157	2.006 / .138	-
	사업중(b) ('10~'12)	78	.114	.089		
	사업후(c) ('13~'15)	33	.090	.075		
경향신문	사업전(a) ('08~'09)	22	.137	.121	3.676 / .029*	a, b > c (Scheffe 검증)
	사업중(b) ('10~'12)	56	.111	.112		
	사업후(c) ('13~'15)	32	.064	.065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26>은 각 언론사별로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사업 시기에 따라 보도 기사의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339, 중앙일보 P=.105, 한국일보 P=.033, 한겨레신문 P=.509, 경향신문 P=.033)

<표 26>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사업전(a) ('08~'09)	16	.135	.159	1.098 / .339	-
	사업중(b) ('10~'12)	39	.161	.275		
	사업후(c) ('13~'15)	24	.248	.306		
중앙일보	사업전(a) ('08~'09)	14	.318	.263	2.357 / .105	-
	사업중(b) ('10~'12)	21	.166	.206		
	사업후(c) ('13~'15)	17	.182	.179		
한국일보	사업전(a) ('08~'09)	15	.406	.293	3.603 / .033*	유의미한 값 없음
	사업중(b) ('10~'12)	29	.268	.209		
	사업후(c) ('13~'15)	23	.207	.188		
한겨레 신문	사업전(a) ('08~'09)	29	.189	.202	.679 / .509	-
	사업중(b) ('10~'12)	78	.166	.143		
	사업후(c) ('13~'15)	33	.143	.123		
경향신문	사업전(a) ('08~'09)	22	.224	.169	3.518 / .033*	a > c (Scheffe 검증)
	사업중(b) ('10~'12)	56	.168	.164		
	사업후(c) ('13~'15)	32	.110	.134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27>은 전체 분석 대상 보도 기사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와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익명 정보원수 비율' 항목에서 '사업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64, '사업중'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62, '사업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68 로 나타났으며, P값은 .821 이다. 유의 수준 .05에서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은 보도 기사 논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사업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34, '사업중'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11, '사업후'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18 이며 P값은 .771이다. 분석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 사업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종속 변수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익명 정보원수 비율	사업전(a) ('08~'09)	96	.064	.081	.198 / .821	-
	사업중(b) ('10~'12)	223	.062	.074		
	사업후(c) ('13~'15)	129	.068	.089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사업전(a) ('08~'09)	96	.095	.134	.260 / .771	-
	사업중(b) ('10~'12)	223	.085	.111		
	사업후(c) ('13~'15)	129	.090	.118		

<표 28>은 각 언론사별로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사업 시기에 따라 보도 기사의 '익명 정보원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한겨레신문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 P=.784, 중앙일보 P=.753, 한국일보 P=.134, 한겨레신문 P=.018, 경향신문 P=.043)

<표 28>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사업전(a) ('08~'09)	16	.083	.084	.245 / .784	-
	사업중(b) ('10~'12)	39	.093	.091		
	사업후(c) ('13~'15)	24	.105	.121		
중앙일보	사업전(a) ('08~'09)	14	.020	.047	.285 / .753	-
	사업중(b) ('10~'12)	21	.033	.053		
	사업후(c) ('13~'15)	17	.033	.064		
한국일보	사업전(a) ('08~'09)	15	.050	.090	2.074 / .134	-
	사업중(b) ('10~'12)	29	.033	.051		
	사업후(c) ('13~'15)	23	.079	.102		
한겨레 신문	사업전(a) ('08~'09)	29	.090	.095	4.157 / .018*	a, b > c (Dunnett T3 검증)
	사업중(b) ('10~'12)	78	.079	.079		
	사업후(c) ('13~'15)	33	.038	.052		
경향신문	사업전(a) ('08~'09)	22	.054	.060	3.246 / .043	-
	사업중(b) ('10~'12)	56	.045	.053		
	사업후(c) ('13~'15)	32	.081	.083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표 29>는 각 언론사별로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사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경향신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 P=.860, 중앙일보 P=.874, 한국일보 P=.504, 한겨레신문 P=.060, 경향신문 P=.039).

<표 29> 언론사별 사업시기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분산분석 결과

구 분	사업 시기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조선일보	사업전(a) ('08~'09)	16	.120	.138	.151 / .860	-
	사업중(b) ('10~'12)	39	.138	.142		
	사업후(c) ('13~'15)	24	.121	.136		
중앙일보	사업전(a) ('08~'09)	14	.048	.134	.135 / .874	-
	사업중(b) ('10~'12)	21	.033	.053		
	사업후(c) ('13~'15)	17	.043	.083		
한국일보	사업전(a) ('08~'09)	15	.099	.185	.692 / .504	-
	사업중(b) ('10~'12)	29	.065	.119		
	사업후(c) ('13~'15)	23	.109	.129		
한겨레 신문	사업전(a) ('08~'09)	29	.115	.134	2.876 / .060	-
	사업중(b) ('10~'12)	78	.099	.107		
	사업후(c) ('13~'15)	33	.054	.080		
경향신문	사업전(a) ('08~'09)	22	.077	.083	3.357 / .039*	유의미한 값 없음
	사업중(b) ('10~'12)	56	.057	.085		
	사업후(c) ('13~'15)	32	.115	.131		

* P < .05 , ** P < .01 , 사후검증은 .0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

사업 추진 시기에 따른 언론 보도 타당성 분석 결과 '사실문장비율' 과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익명 정보원수 비율'와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문장비율 P=.000, 정보원수 비율 P=.026, 정보원 진술수 비율 P=.020, 익명 정보원수 비율 P=.821,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P=.771).

사실문장비율은 사업후의 값이 .500, 사업중의 값이 .490, 사업전이 .382로 사업후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보원수 비율에서는 사업전이 .142, 사업중이 .109, 사업후가 .102로 사실문장비율과 역순을 나타내었다.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는 사업전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중 .179 , 사업후 .171의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석하면 사업전에는 주로 정보원에 의존한 보도 기사가 작성되었으나, 사업후에는 사실(fact)에 기반하여 보도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언론사별 분석 결과로 '사실문장비율'에서는 한국일보(P=.002)와 한겨레신문(P=.008)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두 언론사 모두 사업 이후가 '사실문장비율'이 높았다. '정보원수 비율'에서는 경향신문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P=.029) 사업전이 가장 높았다. '정보원 진술수 비율'은 한국일보(P=.033)와 경향신문(P=.033)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술수 비율 역시 사업전이 사업 후보다 높았다. '익명 정보원수 비율'은 한겨레신문에서 차이를 보였는데(P=.018) 사업전이 사업후 보다 높았으며,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는 경향신문만 차이를 보여주었다(P=.039).

사업시기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4대강살리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사업 관련 사실 정보가 제한적이며 기사 작성의 근거 역시 주로 정보원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사업 전에는 정보원 타당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수록 사실 정보(fact)의 양은 증가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보도 기

사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의 결과가 데이터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도 기사의 사실 비중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표 8> 구성 항목간 상관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실 문장 비율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은 역의 상관관계(-.486)가 있기 때문에 정보원 비율은 사업이 진행되고 종료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난다.

2. 정부 변화에 따른 타당성 분석

<표 30>은 전체 분석대상 보도기사에 대해 정부 변화에 따른 '사실문장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t-test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시기의 보도 기사는 319건이며 '사실문장비율'은 .457이 관측되었다. '박근혜 정부'시기의 보도기사는 129건으로 그 값은 .500이다. 분석 결과 P값은 .038이 도출되었다. 유의수준 .05에서 정부 변화에 따라 '사실문장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 30> 정부 변화 따른 '사실문장비율' t-test 결과

종속 변수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t 값	유의 확률
사실문장 비율	이명박 정부 ('08~'12)	319	.457	.199	-2.079	.038*
	박근혜 정부 ('13~'15)	129	.500	.189		

* P < .05 , ** P < .01

<표 31>은 각 언론사별로 정부 변화에 따른 '사실문장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정부 변화에 따라 보도 기사의 '사실문장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한국일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815, 중앙일보 P=.468, 한국일보 P=.029, 한겨레신문 P=.301, 경향신문 P=.116)

<표 31> 언론사별 정부변화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t-test 결과

구분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 ('08~'12)	55	.476	.183	.235	.815
	박근혜 정부 ('13~'15)	24	.465	.185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08~'12)	35	.441	.213	-.731	.468
	박근혜 정부 ('13~'15)	17	.485	.169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 ('08~'12)	44	.320	.225	.994	.029*
	박근혜 정부 ('13~'15)	23	.447	.216		
한겨레신문	이명박 정부 ('08~'12)	107	.488	.184	-1.038	.301
	박근혜 정부 ('13~'15)	33	.528	.214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08~'12)	78	.487	.180	-1.586	.116
	박근혜 정부 ('13~'15)	32	.544	.148		

* P < .05 , ** P < .01

<표 32>는 전체 분석 대상 보도 기사에 대해 정부 변화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와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정보원수 비율' 항목에서 '이명박 정부'시기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19, '박근혜 정부' 시기의 보도 기사 평균값은 .102로 관측되었다. P값은 .163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정보원 진술수 비율'은 정부 변화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이명박 정부'시기의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97, '박근혜 정부'시기의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1.171이며, P값은 .214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2> 정부변화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종속 변수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t 값	유의 확률
정보원수 비율	이명박 정부 ('08~'12)	319	.119	.120	1.398	.163
	박근혜 정부 ('13~'15)	129	.102	.110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이명박 정부 ('08~'12)	319	.197	.206	1.245	.214
	박근혜 정부 ('13~'15)	129	.171	.194		

<표 33>은 각 언론사별로 정부 변화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정부 변화에 따라 보도 기사의 '정보원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경향신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조선일보 P=.054, 중앙일보 P=.746, 한국일보 P=.081, 한겨레신문 P=.128, 경향신문 P=.013).

<표 33> 언론사별 정부변화에 따른 '정보원수 비율' t-test 결과

구분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 ('08~'12)	55	.070	.098	-1.960	.054
	박근혜 정부 ('13~'15)	24	.134	.189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08~'12)	35	.131	.131	-.326	.746
	박근혜 정부 ('13~'15)	17	.144	.119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 ('08~'12)	44	.163	.145	1.773	.081
	박근혜 정부 ('13~'15)	23	.107	.062		
한겨레신문	이명박 정부 ('08~'12)	107	.122	.112	1.531	.128
	박근혜 정부 ('13~'15)	33	.090	.075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08~'12)	78	.118	.114	2.515	.013*
	박근혜 정부 ('13~'15)	32	.064	.065		

* P < .05 , ** P < .01

<표 34>는 각 언론사별로 정부 변화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정부 변화에 따라 보도 기사의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경향신문은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P=.150, 중앙일보 P=.503, 한국일보 P=.072, 한겨레신문 P=.348, 경향신문 P=.028).

<표 34> 언론사별 정부변화에 따른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구분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 ('08~'12)	55	.153	.246	-1.454	.150
	박근혜 정부 ('13~'15)	24	.248	.306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08~'12)	35	.227	.239	.675	.503
	박근혜 정부 ('13~'15)	17	.182	.179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 ('08~'12)	44	.315	.246	1.829	.072
	박근혜 정부 ('13~'15)	23	.207	.188		
한겨레신문	이명박 정부 ('08~'12)	107	.172	.160	.942	.348
	박근혜 정부 ('13~'15)	33	.143	.123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08~'12)	78	.184	.166	2.229	.028
	박근혜 정부 ('13~'15)	32	.110	.134		

* P < .05 , ** P < .01

<표 35>는 전체 분석 대상 보도 기사에 대해 정부 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와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익명 정보원수 비율' 항목에서 '이명박 정부'시기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63, '박근혜 정부' 시기의 보도 기사 평균값은 .068로 관측되었다. P값은 .548로, 유의 수준 .05에서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은 정부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이명박 정부'시기의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88, '박근혜 정부'시기의 보도 기사의 평균값은 .090이며, P값은 .850으로 나타났다.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35> 정부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종속 변수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 편차	t 값	유의 확률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이명박 정부 ('08~'12)	319	.063	.076	-.600	.548
	박근혜 정부 ('13~'15)	129	.068	.089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이명박 정부 ('08~'12)	319	.088	.118	-.189	.850
	박근혜 정부 ('13~'15)	129	.090	.118		

<표 36>은 각 언론사별로 정부 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정부 변화에 따라, 유의 수준 .05에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선일보 P=.531, 중앙일보 P=.721, 한국일보 P=.058, 한겨레신문 P=.006, 경향신문 P=.014)

<표 36> 언론사별 정부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수 비율' t-test 결과

구분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 ('08~'12)	55	.090	.089	-.629	.531
	박근혜 정부 ('13~'15)	24	.105	.121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08~'12)	35	.027	.050	-.358	.721
	박근혜 정부 ('13~'15)	17	.033	.064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 ('08~'12)	44	.039	.066	-1.929	.058
	박근혜 정부 ('13~'15)	23	.079	.102		
한겨레신문	이명박 정부 ('08~'12)	107	.082	.084	2.812	.006**
	박근혜 정부 ('13~'15)	33	.038	.052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08~'12)	78	.047	.055	-2.493	.014*
	박근혜 정부 ('13~'15)	32	.081	.083		

* P < .05 , ** P < .01

<표 37>은 각 언론사별로 정부 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언론사별 보도 기사를 정부 변화에 따라 보도 기사의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유의 수준 .05에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선일보 P=.734, 중앙일보 P=.862, 한국일보 P=.371, 한겨레신문 P=.023, 경향신문 P=.015)

<표 37> 언론사별 정부변화에 따른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t-test 결과

구분	정부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 ('08~'12)	55	.133	.139	.341	.734
	박근혜 정부 ('13~'15)	24	.121	.136		
중앙일보	이명박 정부 ('08~'12)	35	.039	.093	-.174	.862
	박근혜 정부 ('13~'15)	17	.043	.083		
한국일보	이명박 정부 ('08~'12)	44	.077	.143	-.900	.371
	박근혜 정부 ('13~'15)	23	.109	.129		
한겨레신문	이명박 정부 ('08~'12)	107	.103	.114	2.306	.023*
	박근혜 정부 ('13~'15)	33	.054	.080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08~'12)	78	.063	.085	-2.479	.015*
	박근혜 정부 ('13~'15)	32	.115	.131		

* P < .05 , ** P < .01

정부 변화에 따른 언론 보도 타당성 분석 결과 '사실문장비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38). 사실문장비율은 박근혜정부는 .500 값을 나타냈으며, 이명박 정부는 .457 값을 나타내어 박근혜정부에서의 사실문장비율이 이명박 정부보다 높았다.

나머지 '정보원수 비율'와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수 비율'와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정보원수 비율 P=.163, 정보원 진술수 비율 P=.214, 익명 정보원수 비율 P=.548,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P=.850).

각 언론사별 분석 결과로 '사실문장비율'에서는 한국일보(P=.029)가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의 경우 이명박 정부(.320)보다 박근혜 정부(.447)의 값이 높았다. '정보원수 비율'에는 경향신문(P=.013)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명박 정부(.118)시기 대비 박근혜 정부(.064)시기에 정보원수 비율값이 낮아졌다.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익명 정보원수 비율'에서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차이를 보였으며(한겨레신문 P=.006, 경향신문 P=.014),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만이 차이를 보였다(한겨레신문 P=.023, 경향신문 P=.015).

정부 변화에 따른 사실 타당성의 차이는 앞에서 살펴본 사업 시기에 따른 변화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사업이 진행 될수록 사실(fact)의 양이 증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사실문장 비율은 증가하게 됨을 추정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5개 일간지의 언론 보도의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당성은 '진술적 타당성'과 '규범적 타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이준웅, 2010), 이번 연구에서는 '진술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도 기사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진술적 타당성' 분석은 보도 기사가 얼마만큼 형식적 요소를 갖추어 구성되었는가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보도 기사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 사실의 적시량(사실문장비율), 정보원의 수, 정보원의 진술수를 비율로 계량화하여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언론사에 따른 타당성 차이, 기사 논조에 따른 타당성 차이, 사업시기와 정부변화에 따른 타당성 차이를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보도 기사를 문장단위로 코딩하여 비율로 환산한 데이터를 ANOVA분산분석과 t-test를 통해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1 인 4대강살리기사업에 대해 언론사에 따라 언론보도의 타당성에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언론사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1)]

'사실문장비율'항목에서는 경향신문이 가장 높은 .504, 한겨레신문은 .498, 조선일보는 .473, 중앙일보는 .456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일보는 .364를 나타냈다. '정보원수 비율' 에서는 한국일보가 가장 높은 .144, 중앙일보 .135, 한겨레신문 .114, 경향신문 .102, 조선일보 .089 순이었다. '정보

1) 사실문장비율 P=.000, 정보원수 비율 P=.032, 정보원 진술수 비율 P=.001, 익명 정보원수 비율 P=.000,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P=.000

원 진술수 비율'은 한국일보 .278, 중앙일보 .212, 조선일보 .182, 한겨레신문 .165, 경향신문은 .162 이다. '익명 정보원수 비율'와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항목에서도 언론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사에 따른 구분에서 '사실문장비율' 평균값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 평균값 간에 -.992(P=.001)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사의 구성에서 사실문장과 정보원 진술수 문장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론사별로 타당성의 차이는 한국일보에서 나타났다. 한국일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립적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언론의 객관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언론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균형을 추구하는데(이준웅, 2005), 한국일보 역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의 의견을 동시에 나타내면서 '정보원 진술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2 인 보도기사의 논조에 따른 타당성의 차이 분석 결과로, '사실문장비율',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항목 모두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2] 또한 개별 언론사별로 나누어 논조에 다른 타당성 분석을 하였을 경우에도 위의 5가지 항목에서 모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문제2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보도 기사의 논조에 따라 언론 보도의 타당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 내릴 수 있다.

'점화효과 이론'에 따르면 기존의 개인의 의견과 언론의 보도가 일치할 때 의견은 더욱 공고화 된다. 이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방법으로 언론 보도의 사실 타당성 또는 정보원의 타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문제2의 실증분석 결과, 논조에 따라 유의미한 타당성의 차이는 나타

2) 사실문장비율 P=.253, 정보원수 비율 P=.137, 정보원 진술수 비율 P=.289, 익명 정보원수 비율 P=.525,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P=.260

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이는 점화효과가 언론보도의 타당성과 다른 측면의 문제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3 인 사업시기별, 정부변화별 타당성의 차이 분석 결과로, 사업시기에 따른 '사실문장비율',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는 언론사별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실문장비율' 분석 값은 사업후 .500, 사업중 .490, 사업전 .382 로 측정되었다. 사업후가 사업전보다 '사실문장비율'에서는 높은 값을 보였다. '정보원수 비율'에서는 사업전 .142, 사업중 .109, 사업후 .102 가 나타났으며,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서는 사업전 2.41, 사업중 .179, 사업후 .171 순서로 측정되었다. '정보원수 비율과 정보원 진술수 비율' 항목에서는 사업전이 사업후 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익명 정보원수 비율'와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에 있어서는 사업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업 시기에 따라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3)]

정부 변화에 따른 타당성 분석은 '사실문장비율'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4)] '사실문장비율'은 박근혜 정부가 .500, 이명박 정부가 .457로 박근혜 정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사업시기에 따른 분석에서 사업후의 사실문장비율이 사업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와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 나머지 항목인 '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익명 정보원수 비율', '익명 정보원수 비율'에서는 정부의 변화에 따라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3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시기별로 사업전과 이명박 정부에

---

3) 사업시기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사실문장비율 P=.000, 정보원수 비율 P=.026, 정보원 진술수 비율 P=.020, 익명 정보원수 비율 P=.821,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P=.771

4) 정부변화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사실문장비율 P=.038, 정보원수 비율 P=.163, 정보원 진술수 비율 P=.214, 익명 정보원수 비율 P=.548, 익명 정보원 진술수 비율 P=.850

정보원의 수와 정보원 진술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후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문장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주로 정보원과 정보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지만, 사업후에는 사업에 의한 사실적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되어 사실문장비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갈등적 이슈였던 4대강살리기사업 관련 보도 기사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보도 기사의 행태에 대한 이해를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타당성을 보도 기사의 진술적 측면의 타당성에 대해 연구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타당하다는 것은 진술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준웅, 2010). 가치가 민주적으로 경합되는 담론의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김현강(2016)의 지적은 언론의 공정성과 규범성에 시사점을 준다.

이준웅・김경모(2008)는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 조건중 하나로 타당성을 제시하며, 검증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도 기사는 뉴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보도는 정부정책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보도의 타당성은 진술적 언행에 있어 근거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보도 기사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로 하여금 타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바람직한 뉴스가 작성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발전 방향

이번 연구는 '4대강살리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의 타당성이 언론사별, 논조별, 사업 시기별, 정부별로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사별, 사업시기 별로는 타당성에 차이가

있지만, 논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타당성의 차이 여부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어떤 요인이 타당성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지는 이번 연구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언론사에 따라 타당성의 차이가 명확하게 발생하는데 이번 연구만으로는 원인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웠다. 타당성의 차이가 언론사별 기사작성 지침 등에 의해 발생하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보도 기사의 타당성 측정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사업 관련 사실(fact)의 양은 사업전보다 사업후에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사실(fact)의 양은 타당성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 사실문장비율은 사업후(2013년～2015년)가 가장 높았으며, 정보원수 비율와 정보원 진술은 사업전(2008년～2009년)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이상률・이준웅(2014)의 검・경 수사권 관련 연구에서 프레임 경쟁기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규정하고, '프레임 경쟁기에 언론 보도의 타당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 프레임 경쟁기에는 언론의 공론장이 기능이 활성화 되어 타당성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 선행연구의 해석이 이번 4대강살리기사업 언론보도 연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4대강살리기사업의 경우 사업중(2010년～2012년)의 기사량이 49.7%를 차지하였다. 기사량을 고려할 경우, 이 시기를 가장 논란이 많은 시기(경쟁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당성이 높은 시기는 경쟁기보다는 사업전(정보원수 비율, 정보원 진술수 비율), 사업후(사실문장비율)였다. 경쟁기일지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에 따라 타당성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연구논문>

김경모(2012). 온라인 뉴스 확산과 여론 형성. 『언론과학연구』, 12(4), 35-72.

김상호(2007).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분석적 고찰. 『언론과학연구』, 7(3), 5-38.

김성태・이영환(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0(3), 175-204.

김영욱・임유진(2009).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94-115.

김영욱(2010). 선전인가, 공익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6권 1호, 295-336.

김영욱(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5, 107-136.

김원용・이동훈(2004). 신문의 보도 프레임 형성과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4), 351-380.

김원용・이동훈(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49(6), 166-197.

김현강(2016). 언론의 공정성 개념. 『담화와 인지』, 23(1), 57-87.

나은경・송현주・김현석・이준웅(2008). 정서의 프레이밍. 『한국언론학보』, 52(2), 378-406.

남재일(2006). 1987년 민주화 이후 취재관행에 나타난 정권-언론 관계 변화. 『한국언론학회』, 50권 4호, 95-122.

문종대(1997). 정책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과 사회』, 1997.9, 41-68.

문종대・윤영태(2004). 언론 공정성 개념의 재개념화.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 93-122.

박기묵(2015).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과 사례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4(3), 29-59.

박기수(2011). 4대강 사업 뉴스에 대한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학보』. 55(4), 5-26.

박권상(1996). 정부와 언론의 관계. 『관훈저널』, (61), 65-76.

박승관・장경섭(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한국방송학보』,14(3), 81-113.

박승관・장경섭(2001). 한국 사회의 이중적 법질서와 언론 권력의 관계. 『한국사회학』, 35(2), 91-114.

박지성・남기범・오재록(2012). 관료권력과 언론보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연구』, 12(2), 147-165.

박재영・이완수(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韓美)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6), 439-468.

박형준(2013). '공정성'개념과 평가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3(1), 262-289.

서병호・김춘식(2001). 정부의 대언론 홍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216-246.

서영남・박종민(2008). 문민, 국민,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현황을 통한 정부의 대언론관계. 『한국언론학보』, 52(2), 5-39.

송현주(2006).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정책 이슈의 유인가적 유사성이 뉴스매체의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308-336.

유재천(2003). 정부와 언론의 관계. 『관훈저널』, 통권 87호, 177-214.

윤순진・이동하(2010).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7-62.

이광재(1995). 취재원 익명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널리즘비평』, 17, 2-6.

이완수・박재영(2013).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1), 5-46.

이종혁(2015). 언론 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1), 7-36.

이상률・이준웅(2014). 프레임 경쟁에 따른 언론의 보도 전략. 『한국언론학보』, 58(3), 378-407.

이준웅(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방송문화연구』, 17(2), 139-172.

이준웅(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1997.9, 100-135.

이준웅(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000.12, 85-153.

이준웅(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1), 441-482.

이준웅(2001). 보도에 따른 여론 변화 설명에 유용. 『신문과 방송』, 2001.10, 40-45.

이준웅(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이밍 모형 검증 연구. 『한국언론학보』, 49(1), 133-162.

이준웅(2010).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문제. 『한국언론학보』, 54(2), 187-209.

이준웅・김경모(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67호, 9-44.

이준웅・최영재(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한국언론학보』, 49(5), 5-35.

이진로(2015). 미디어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 『정치와평론』, 17집, 31-47.

이재경 (2001).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관행: 한국과 미국 신문의 취재원 사용 관행. 『보도비평』, 7호, 53-82

이재진(2008). 언론의 파수견 개념의 발전과 적용. 『한국언론정보학보』, 2008.2, 108-144.

임현수・이준웅(2011).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5-30.

장하용(1997). 한국 언론의 여론형성 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학보』, 41호, 108-141.

정은영・성석주・최봉기(2009). 언론보도가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1호, 207-232.

최경진(2003). 한국의 정부와 언론의 갈등적 관계에 관한 일 고찰. 『언론과학연구』, 3(3), 95-132.

최영재・홍성구(2004). 언론 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6), 326-342.

최용주(1996).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언론과 정치의 상호침투. 『언론과 사회』, 1996.3, 6-33.

최진호・곽은아・한동섭(2016). 전국언론과 지역언론의 취재원 활용 관행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16(2), 214-241.

한동섭・유승현(2008).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4), 702-739.

황상재・정연구・박성순・홍석민(2012). 정부와 언론간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2(4), 643-676.

Entman, R, M(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단행본>

국토해양부 (2012), 「4대강살리기사업」

김민환 (1999), 「언론문장연습」, 나남신서
Jürgen Habermas(1962, 1990).「공론장의 구조변동」(한승완. 옮김). 나남신서.

<기타자료>

조선일보 : www.chosun.com

부 록

1. 분석 대상 기사 목록

<조선일보>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대운하 건설 묵과 못한다	2008-03-19
2	4대江 정비계획 실체는 결국 대운하	2008-05-26
3	대운하 논쟁" 다시 물길 트나	2008-11-07
4	4대江 정비" 한다고하니 대운하주 급등	2008-12-12
5	4대江 프로젝트" 바로 착수	2008-12-16
6	3층집 지으려다 수십층 빌딩으로 바꾸는 것과 비슷	2008-12-23
7	4대江 정비사업 29일 첫 삽	2008-12-26
8	'4대강 살리기' 조직 확대 개편	2009-04-09
9	"4대강 살리기" 9월 본격 착공	2009-04-28
10	환경단체들"영산강 支川오염 대책을"	2009-06-02
11	계획 바꿔 "보" 높이고, 깊이 파고 의혹 키우는 4대강 사업	2009-06-24
12	"4대강 보상금" 올해 6000억 풀린다	2009-08-14
13	4대강 주변도시 따라 디자인 물결"이 흐른다	2009-09-22
14	물막이 등 15개 보 공사 본궤도에	2009-11-09
15	MB "4대강, 앞으론 답변 않겠다"	2009-12-03
16	4대강 입장差 커웃으며 헤어질 수 있을까	2009-12-17
17	4대江 2 차 공사, 이달 말 본격 착공	2010-01-19
18	李대통령 "4대江 사업은 내 소신"	2010-03-24
19	贊·反 양측, 수질 전망 극과 극" "한쪽은 틀린 주장하고 있다	2010-04-12
20	"하천 생태계 빨리 복원 "물고기 종류 크게 줄 것	2010-04-15
21	4대강 준설 규모 계획보다 9% 축소	2010-04-20
22	보 철거되니 여울 생기고 강변에 모래밭 쌓여	2010-04-22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3	안희정씨“4대강 예산 교육·복지에 투자”	2010-04-28
24	정부 4대강 살리기″ 대국민토론회 제안	2010-05-10
25	4대종단 ″생명 고리 끊는 4대강 사업 중단 한기총 ″생태복원 칭찬할 만 적극 지지	2010-05-26
26	″영산강에 보 만들고 준설도 해야	2010-06-09
27	박준영 지사“영산강 정비 절실”	2010-06-15
28	4대강 보에 水門 설치	2010-06-19
29	북한강 지구 4대강″ 사업은 지금	2010-06-24
30	준설토 적치장 확보 늦어져 폭우땐 오염된 흙 흘러들 우려	2010-07-01
31	경남도 ″4대강 사업 5개 공구 공사 보류	2010-07-23
32	주민·市郡 4대강″ 찬성에 정치적 반대″ 설 땅 잃어	2010-08-05
33	“기후변화에 대응 4대강 사업 지지”	2010-08-20
34	4대강 보 공정률 51% 준설은 30% 넘어	2010-10-04
35	″4대강 대운하 반대 국민운동 할 것	2010-10-28
36	국토부, 진주 남강 공사 직접 발주	2010-11-19
37	홍수예방·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 정당	2010-12-11
38	강바닥 준설 규모 20% 줄여	2010-12-28
39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는 환수	2011-01-04
40	4대강 살리기 준설공사 장마 전까지 완공할 것	2011-03-04
41	지류 정비, 1단계 15조… 2단계 포함땐 30조	2011-04-15
42	국토부 기록적 폭우에도 전국 피해액 84억원	2011-07-22
43	4대강 보 4곳 오늘 동시 개방	2011-10-22
44	판사, 이례적 2억 배상 판결	2011-11-10
45	4대강 일부 하자 보수 준공 내년 4월로 늦춰	2011-12-01
46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성 인정되지만 사업 취소할 수는 없어	2012-02-11
47	4대강 점검 정부 발표 신뢰 못 얻는 이유는…	2012-03-13
48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 임박	2012-04-19

	기사 제목	보도 일자
49	한강~낙동강 자전거길 첫 도보 종주한 60대	2012-05-29
50	대홍수 겪었던 태국에 4대강 수출하나	2012-07-10
51	태국 12兆 치수사업… 4대강 드림팀이 간다	2012-07-26
52	국토부, 태국과 수자원 기술협력 MOU	2012-08-16
53	태국판 4대강 사업 심사통과 5곳 중 2곳 한국업체	2012-09-22
54	금강 물고기 3만마리 이어… 낙동강 1500마리 떼죽음	2012-10-26
55	4대강 공사 담합 과징금 부과 삼성물산·대우건설에 95억원	2012-12-24
56	태국판 4대강 사업 참여 한·중·일 3파전 벌일 듯	2013-01-04
57	태국판 4대강 수주, 환경연합 등 현지 반대운동	2013-01-16
58	정권말만 되면 민감 이슈 특감 벌이는 감사원	2013-01-19
59	한국, 태국판 4대강 사업 수주 유력	2013-02-06
60	4대강 수질 개선 쉽지 않아… 원상복구도 방법	2013-02-28
61	검찰, 4대江 사업 의혹 특별팀 만들어 수사	2013-04-22
62	감사원, 권도엽 前장관도 조사 4대강 담합사건 監査 범위 확대	2013-06-05
63	4大江, 대운하 염두에 두고 4兆 더 썼다	2013-07-11
64	감사원, 2010년 監査땐 문제 없다더니…	2013-07-12
65	태국, 수조원 규모 물관리사업 한국 정부에 마스터플랜 요청	2013-07-24
66	尹환경 4대강 洑 때문에 녹조 더 나타나	2013-08-08
67	환경부·국토부 간 4대강 녹조 공방 정부 신뢰 훼손시켜	2013-08-13
68	4대강 평가위원장 전격 사퇴 국무조정실 人事 검증 구멍	2013-09-13
69	4大江, MB 사법처리 검토 감사원 답변 파문	2013-10-16
70	4대강 담합 無관용… 前 건설사 대표들 執猶	2014-02-07
71	건설사, 公共공사 기피 돈 안되고 담합판정 우려	2014-05-12
72	57억짜리 4대강 로봇 물고기 는 불량품	2014-07-31
73	문희상 4大江·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	2014-10-28
74	4대강 보 6곳, 강바닥 아래로 물이 줄줄	2014-12-18
75	4대강 2500여쪽 원본 보고서도 곧 공개	2014-12-24

	기사 제목	보도 일자
76	MB 외국선 4大江 수입하려는데…	2015-01-02
77	저수량 97% 달하는 강천보 활용… 지역 정수장엔 비상관로 연결	2015-06-30
78	김무성 “4대강 2차사업 착수할 것”	2015-10-29
79	가뭄이 복권시킨 4대강	2015-11-13

<중앙일보>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대운하반대대응책요구” “어떤경로로도강요안해”	2008-05-26
2	정부‘4대 강 정비’추진 야당“대운하 의도”반발	2008-11-27
3	4대 강 정비에 14조원 투입	2008-12-16
4	만족 불만감 교차 속 4대 강 정비는 환영	2008-12-16
5	“4대 강 정비는 환경파괴 아닌 녹색성장 기회”	2008-12-23
6	4대 강에 1 000일 동안 19만 명 ″ 물길 따라 일자리 만든다	2008-12-30
7	태화강, 4대강 살리기 모델 되나	2009-04-10
8	영주 송리원댐 건설 확정에 봉화군 반발	2009-06-01
9	“강 살리면 경제도 살아날 것”	2009-07-09
10	“4대 강 살리기 철저하게 감사”	2009-09-08
11	4대 강 사업“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한 달 만에 입장 바꾼 수자원공사 왜	2009-10-07
12	“4대 강 입찰 담합 정황 포착”	2009-11-12
13	MB, 수질감시‘물고기 로봇’소개 ″환경 기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2009-11-28
14	국토부,″4대″강″보에″수상″비행장″설치″검토	2009-12-28
15	4대 강 주변 볼거리 50곳 묶어 ‘생태 올레길’10개 코스 만든다	2010-02-08
16	금강 살리기 갑천1지구 사업 착공	2010-03-25
17	선관위 ‘4대 강 반대 운동’ 첫 검찰 고발	2010-05-13
18	4대강은 GO!	2010-06-15
19	4대강 임시 물막이 이달 말까지 철거	2010-06-21
20	“4대 강 사업에 석 면 섞인 돌 사용”	2010-07-15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1	안희정 충남지사도 4대 강 조건부 찬성	2010-08-05
22	김황식“4대강감사,가능한빨리”	2010-09-14
23	31.4% 4대강 사업 평균 공정률, 계획 대비 104% 진척	2010-10-28
24	“4대 강 사업 예산 70% 잘라내겠다”	2010-11-15
25	“배추값 폭등 4대 강 탓” 외치던 그들 값 떨어지자 “기상이변도 지적했었다”	2010-12-16
26	친 수구역, 10만㎡ 이상 돼야 허가	2011-01-04
27	4대 강 수질 측정‘보 ’에서 한다	2011-06-16
28	한강서 서해까지자전거길로달린다	2011-09-22
29	황포돛배 불 밝혀라, 남한강 금물결 달려온다	2011-11-18
30	영산강 사업은 정당 광주고등법원 판결	2012-02-16
31	5개 보 물 샌다 vs 안전 문제없다	2012-03-29
32	4대 강 공사비 40억 빼돌려 공무원에 수천만원씩 뇌물	2012-05-28
33	서낙동강 유역에 인구 8만 신도시 만든다	2012-07-12
34	대전·나주·부여에 ‘친수구역’ 주거·상업·관광지로 개발	2012-09-06
35	대구관광사진전 금상에 ‘ … 명물 디아크’	2012-12-24
36	낙동강변·팔공산에 오토캠핑장 만든다	2013-01-09
37	5년 침묵하더니 감사원의 꼼수	2013-01-19
38	MB 퇴임 다음날, 국회 4대 강 감사 의결	2013-02-27
39	낙동강이 부른다 야영객들 신났다	2013-04-10
40	4대 강 관련 김중겸 현대건설 전 사장 조사	2013-06-01
41	“4대강 목표는 한반도대운하”	2013-07-31
42	4대 강 ‘정치감사’논란 … 양건, 결국	2013-08-24
43	장승필 4대강평가위원장 사퇴	2013-09-13
44	“공공기관, 이익으로 이자도못갚아 보금자리·철도 등 사업축소 불가피”	2013-12-11
45	4대 강 32곳 중 13곳 수질 악화	2014-02-04
46	가뭄·녹조 … 낙동강은 거대한 ‘오염 호수’	2014-07-28
47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7곳에 과징금 152억	2014-11-10

	기사 제목	보도 일자
48	보 16개 중 6개서 물 새는 현상 … 저지대 홍수는 줄어	2014-12-24
49	MB "물 공사는 10년이 하자 보수 기간"	2015-01-02
50	57억 헛 돈 쓴 '로봇 물고기'를 보라 정부가 연구과제 설정하면 어찌 되나	2015-04-27
51	기왕 만들어진 4대 강 '물그릇' … "잘만 쓰면 해갈에 큰 도움"	2015-10-28
52	지금 이 물 저 물 가릴 때냐 … 4대강 입장 바꾼 야당	2015-11-05

<한국일보>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물부족 낙동강에 물주머니 만들자	2008-02-19
2	靑 대운하논의 잠정중단	2008-06-03
3	4대강 낀 지자체들, 유역개발방침 여전	2008-07-02
4	"4대강 수질개선사업 끝내고 운하 연결하자면 안할수 없다"	2008-12-04
5	4대江 정비사업 지금 필요하다	2008-12-13
6	한국판'녹색뉴딜'…19만명일자리·23兆 생산유발효과	2008-12-16
7	"4대강정비사업과 대운하 관련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2008-12-23
8	4대강사업, 지류 수질개선이 우선	2009-06-02
9	4대강살리기 사업비 4조7000억 더 든다	2009-06-02
10	"4대강 보, 저수로에만 설치"	2009-08-25
11	"4대강사업 전방위 감사할 것"	2009-09-08
12	"水公 4대강사업 8조 분담때 5년간 추가이자 1조5100억"	2009-09-11
13	"4대강사업 수질악화" "편견"	2009-10-10
14	"빚더미예산 4대강 전면 중단하라"	2009-11-05
15	4대강예산전쟁 본선 막올라	2009-12-07
16	1300리 물길혁명 '희망물보라'	2010-01-18
17	'행복·경제·문화·생태'…굽이마다 색깔 뚜렷한4대강	2010-01-18
18	사제1100여명"중단하라"	2010-03-10
19	4大강살리기예산' 줄줄샌다'	2010-04-20
20	"인간의 탐욕·조급함… 강이 울고있어요"	2010-04-23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1	법원'4대강소송' 한강 현장검증	2010-05-21
22	골재적치장 허물땐 국유지 활용할 수도 농경지 리모델링 저지도 농민반발 예상	2010-06-07
23	4대강 보 건설, 준설 공사 중단해야"	2010-06-25
24	충북 환경련, 석면 석재 납품업체등 고발	2010-07-16
25	당정, 4대강 예산안 줄인다	2010-08-17
26	'4대강' 낙동강공구서 폐기물 다량 발견	2010-10-01
27	민주당, 반대 여론 확산에 총력전	2010-10-28
28	국민소송단 '4대강 소송' 낙동강서도 졌다	2010-12-11
29	"4대강 축소·속도 조절" 46% "정부 계획대로 추진을" 24%	2011-01-01
30	"4대강 건설사 선금 6700억 유용"	2011-04-06
31	낙동강 광역취수장 보 유실	2011-05-09
32	4대강 일자리 34만개? "실제 4000여 개뿐"	2011-06-24
33	부여·구미 등 "상습 침수지 피해 줄어"... 논산선 "배수문 공사 늦어 침수"	2011-07-16
34	4대강 사업하다...수자원공사 빚 6배 급증	2011-09-21
35	공무원·학생 억지 동원에 TV생중계까지	2011-10-22
36	물 새는 낙동강 상주보 안전진단 없이 '땜질' 처방	2011-11-24
37	'누수 땜질' 낙동강 상주보 이번엔 제방서도 줄줄 샌다	2012-01-17
38	"40조라던 4대강 사업 효과 13조~ 26조 불과"	2012-02-22
39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착수	2012-05-12
40	친수구역 첫 사업지 선정...4대강 논란 '2라운드'	2012-07-12
41	4대강정비 마지막구역 두물머리 농지철거허용... 6일 물리적 충돌 우려	2012-08-04
42	건설사 과징금도 절반 깎아줘	2012-08-24
43	완공도 안된 4대강사업 1000여명무더기포상	2012-10-06
44	4대강 특위 "낙동강 칠곡보 균열... 붕괴 조짐"	2012-11-20
45	인수위 "4대강사업 점검해 보겠다"	2013-01-10
46	전문가 "녹조 만성화·보 붕괴 위험... 상상 이상 피해 올 수도"	2013-01-19
47	'4대강 반대한 학자들 비하' 재미교수에 배상판결	2013-01-21

	기사 제목	보도 일자
48	“4대강 16개 보 없애면 조류농도 최대 57%”	2013-02-01
49	4대강 보 낙수소음 “정부가배상” 첫결정	2013-02-27
50	“4대강 농성지지 시민단체, 손배 책임없다”	2013-04-06
51	4대강유속 느려지며 꾸구리등 멸종위기종 3년만에 자취감췄다	2013-05-01
52	4대강 부실 공사 탓 유실 구간, 혈세로 복구?	2013-06-13
53	준설하고 보 만들면 배가 다닐수 있다?	2013-07-16
54	환경부 “MB정부, 공무원 동원해 녹조 제거”	2013-08-10
55	“대운하 염두에 둔 사업” 결과발표에 양건 부담... 일부 간부와 마찰	2013-08-27
56	공주 공산성 공북루성벽 일부 붕괴	2013-09-16
57	“4대강 사업 후, 보호 동물 28종 낙동강 떠났다”	2013-10-22
58	LH·수자원공사 “국책사업하며 발생한 부채 많은데...”	2013-12-12
59	낙동강 자전거 길 안전에 구멍 ‘숭숭’	2014-01-29
60	큰빗이끼벌레 ‘언제부터 서식’ 논란	2014-07-11
61	檢, 4대강 로봇물고기관련 생산기술硏 연구원수사	2014-10-02
62	또... 4대강 입찰담합 대형건설사 7곳 적발	2014-11-10
63	국조 요구 한창인데... “4대강사업 문제없다” 는 조사위	2014-12-24
64	“4대강녹조차단” 유속은무시한채저류지조성만추진	2015-01-23
65	세계물포럼에 온 WWF 위원장 “ 한국 수자원기술력, 세계와 공유해야”	2015-04-13
66	서병수 부산시장 “ 낙동강하굿둑 개방”	2015-09-24
67	대법 “4대강사업 모두 적법” 6년 논란 종지부	2015-12-11

<한겨레신문>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금강운하 반대 "국민행동" 출범 대전·충청·전북 70여개 단체	2008-02-21
2	“치수 위해서라도 운하 필요하다” ‘물만난’ 건설업계 논리개발 한창	2008-05-23
3	대운하 추진 ‘꼼수’ 대잔치	2008-05-29
4	대운하 다시 띄우기?	2008-12-11
5	물길 정비.제방 보강…“4대강 정비는 대운하 1단계”	2008-12-16

	기사 제목	보도 일자
6	경남도, ‘낙동강 물길살리기’ 민심 왜곡조사	2008-12-19
7	건설업계도 “4대강 정비는 사실상 대운하”	2008-12-24
8	‘4대강 정비사업’ 반발 속 강행	2008-12-30
9	대운하 건설, 4대강 물길정비로 둔갑	2008-12-31
10	때묻지 않은 임진강 습지, 준설로 훼손위기	2009-04-14
11	국책연구기관도 한강.금강 보 건설 ‘부정적’	2009-05-20
12	4대강사업 공사 대부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2009-06-10
13	‘포클레인’ 경기부양 검증도 없이 속도전	2009-06-22
14	환경성 검토 ‘과속 스캔들’	2009-06-26
15	10년 묵은 자료로 ‘환경성 검토’ 뚝딱	2009-07-08
16	“4대강 살리려면 둑.댐 허물어야”	2009-08-22
17	“4대강사업 위해 바꾼 시행령 헌소 낼것”	2009-09-10
18	“강 지키는 게 생명 지키는 일” 시민 격려가 ‘고된싸움’ 버팀목	2009-09-16
19	국토부 “임진강도 4대강과 같은 차원서 정비”	2009-09-24
20	정부부처 블로그마다 온통 ‘4대강 홍보물’	2009-10-05
21	‘1박2일’로 뜬 회룡포, ‘4대강’에 훼손되나	2009-10-16
22	“4대강에 뺏긴 수십년 터전 우리 그냥 농사짓게 해주오”	2009-10-21
23	‘634㎞’ 4달만에 훑고 “수질 좋아진다” 난센스	2009-11-09
24	4대강 보 14곳에 ‘개폐식 수문’	2009-11-16
25	4대강 기공식 ‘이벤트성 여론몰이’	2009-11-23
26	지천관리 잘했기 때문…‘보’는 녹조 등 오염유발	2009-11-30
27	공감 못할 ‘위클리 공감’	2009-12-05
28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뱃길 물대기 의혹”	2009-12-16
29	야 “보 개수.높이 조정” 여 “협상대상 아니다”	2009-12-24
30	“둔치에 쇠꼬챙이만 꽂아도 돈 타더라”	2010-01-04
31	종교계.시민단체 ‘4대강 철회’ 서명운동	2010-01-22
32	“정부, 4대강 침수피해 축소”	2010-02-03

	기사 제목	보도 일자
33	강바닥 함부로 팠다간 유해물질 ‘활개’	2010-02-04
34	“달성보 준설토 ‘중금속 오염’ 기준초과”	2010-02-10
35	지방하천 1만1302㎞ 내년부터 본격 정비	2010-02-16
36	잠 못드는 낙동강 지킴이들	2010-02-24
37	수공 ‘유독성 퇴적토’로 강변공사 했다	2010-03-04
38	문화재 잇단 발굴에도 ‘덮기 바쁜’ 4대강 공사	2010-03-10
39	“홍수 닥쳐도 제방 3m 여유” “공사 하지않아도 2.4m 남아”	2010-03-13
40	경남 출마 야권후보 30명 ‘4대강 저지’ 1인시위 나서	2010-03-16
41	여의도 21배 농지 소멸…하천둔치 땅 보상 못받아	2010-03-18
42	‘물의 날’ 맞아 4대강 반대행사 봇물	2010-03-23
43	MB, 내 귀는 닫고 ‘네 귀는 열어라’	2010-03-26
44	미 650개.일 326개 보.댐 허물어	2010-03-31
45	보-준설.제방-3개 댐 “MB 임기안 완공” 총력	2010-04-06
46	천주교 대구교구 ‘4대강 저지’ 이례적 미사	2010-04-08
47	4대강 10명 중 7명꼴 일방추진 안돼	2010-04-12
48	동아시아 참여불자들 “4대강 사업 반대”	2010-04-14
49	‘4대강 편승’ 대덕보 사실상 백지화	2010-04-17
50	환경부 “한강6공구 생태조사 다시 하라”	2010-04-22
51	‘4대강 가물막이’ 희귀종 죽어난다	2010-04-24
52	도시 시민에도 원고 자격 ‘4대강 소송’ 봇물 터질듯	2010-04-28
53	서울 연합예배.청주 평화미사 종교계 ‘4대강 반대’ 본격행보	2010-04-30
54	4대강 공사에 군대까지 동원	2010-05-05
55	4대강 속도전에 ‘준설토 대란’	2010-05-07
56	명동성당 ‘4대강 반대’ 대규모 시국미사	2010-05-11
57	4대강서 ‘멸종위기 동물 3종’ 추가 발견	2010-05-14
58	2만 농민 내쫓는 ‘4대강’…일자리 고작 1만개	2010-05-18
59	낙동강 준설토 ‘내륙습지 파괴’ 우려	2010-05-20

	기사 제목	보도 일자
60	“모형실험 안한 4대강…세계 유례없어” “보 공정률 30%… 중단땐 국가적 손실”	2010-05-28
61	청와대, 4대강 ‘가던 길 간다’	2010-06-07
62	정 총리 “4대강 규모축소.속도조절 안한다”	2010-06-15
63	청, 4대강 반대 지자체 압박 여론전	2010-06-17
64	낙동강 달성보 일부 공사중단	2010-06-28
65	“구미보 권양대 상부 균열조사” 현장 감리일지에 뚜렷이 기록	2010-07-03
66	중금속 등 오염물질 논란…국토부선 “유출 미미”	2010-07-19
67	4대강 농지리모델링 ‘무더기 위법’	2010-07-28
68	낙동강 준설뒤 부유물질 최고16배	2010-08-04
69	합천 주민들 “보 공사 중단하라”	2010-08-13
70	트위터 “4대강편 방송하라” 서명운동	2010-08-19
71	MBC 간부들 “피디수첩 방영 문제없어”	2010-08-24
72	헛돈 뿌리는 ‘저수지 둑 높이기’	2010-09-04
73	“4대강 국민투표” 야당도 적극 검토	2010-09-24
74	수공, 4대강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2010-10-07
75	“4대강 보.준설 등 공사예산 부풀려 편성”	2010-10-15
76	낙동강6공구 준설토서 ‘오염’ 줄줄	2010-10-22
77	땅주인 동의 없이…‘막무가내’ 4대강공사	2010-11-05
78	‘4대강 공사’ 여주서 군보트 전복 3명 사망	2010-11-18
79	낙동강 12공구 ‘흙탕물 콸콸’	2010-12-02
80	법원 ‘낙동강 소송’도 정부 손 들어줘	2010-12-11
81	‘4대강 로봇물고기’ 두손 든 환경부	2010-12-31
82	4대강변 막개발 더 심해진다	2011-01-04
83	정부 ‘4대강 속도전’ 책임회피 급급	2011-01-25
84	금강 공사현장서 또 기름유출 사고	2011-02-24
85	“4대강 완공뒤 유지·관리비만 연 5794억”	2011-03-29
8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2011-04-20

	기사 제목	보도 일자
87	수공, 보건설때 농지 침수피해 ‘엉터리 조사’	2011-05-05
88	“4대강 사업 때문에 또 물난리” 한나라 의원도 “수공사장 사퇴”	2011-05-13
89	낙동강 계획홍수량 뻥튀기, 왜?	2011-06-14
90	4대강 사업에 발 담근 수자원학회도 ‘4대강 비판’	2011-06-23
91	4대강 준설토 붕괴…비닐하우스 400동 침수	2011-07-12
92	정부, 4대강 홍보비로 ‘펑펑’	2011-08-27
93	경찰, 반대집회 접수조차 거부	2011-09-30
94	함안창녕보 예상 침수피해 조사 결과 내놓고 8개월째 공개 ‘미적’	2011-10-26
95	‘4대강사업 탓 지하수 고갈’ 사실로	2011-12-28
96	낙동강변 농민 10만명 올 농사 망치나	2012-01-11
97	콘도·상가·유람선…4대강 주변 ‘막개발 경보’	2012-03-05
98	이포보에 녹조 번식…시공업체선 취재방해	2012-04-12
99	지자체 떠넘겨진 낙동강 편익시설 관리 ‘비상’	2012-06-20
100	‘4 대강 비판’ 고소한 수공	2012-07-10
101	4대강 ‘친수구역’ 임대주택 비율 대폭완화	2012-07-23
102	“보로 가로막힌 낙동강, 폭염에 녹조 호수로 변했다”	2012-08-07
103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이 ‘낙동호’ 됐다	2012-08-31
104	세굴현상, 보강공사 뒤에도 또 발생…4대강 보 안전성 의문	2012-09-21
105	청와대 ‘ 4 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2012-10-12
106	금강 · 낙동강 물고기 폐사 조사단 구성부터 ‘삐거덕’	2012-11-08
107	4대강 자전거길 낸다며 대구 식수원 위협	2012-12-18
108	4대강 살리기는커녕 수질 악화됐다	2013-01-18
109	“보 붕괴 위험 포함해 전면조사를” 국회·시민사회 ‘4대강 해법’ 공론화	2013-01-21
110	정부 “총리실 주도 4대강 재검증”…감사원 “심각한 사태”	2013-01-24
111	금강 지천 제방 100여m 붕괴…“4대강 사업 따른 역행침식 탓”	2013-02-07
112	4대강 감사 미흡 땐 국정조사	2013-03-18
113	새들도 금강을 뜨는구나	2013-04-03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14	애물단지 전락 ‘ 4 대강 준설토’ 모래 더 쌓아 썰매장 만든다?	2013-06-20
115	박대통령 “4대강 무리한 부분, 과감히 정리해야”	2013-07-16
116	보 없앴더니 4급수→1급수…고양 공릉천, 건강을 되찾다	2013-07-30
117	‘4 대강 사업’ 국민검증 돌입	2013-08-07
118	낙동강 녹조, 중상류 지역으로 확산	2013-08-21
119	4대강 조사위원장에 찬성론자 임명 논란	2013-09-09
120	MB “4대강 수심 5~6m로 파라” 직접지시	2013-10-03
121	4대강 복원 특별법 3건 야당 동시발의	2013-10-11
122	‘로봇물고기’ 60억 들여 개발은 했는데…	2013-10-22
123	“낙동강변 시설 관리비 정부가 부담을”	2013-11-26
124	4대강 사업 황당 훈포장	2013-12-09
125	끝내 묻히고 만 물고기들의 억울한 죽음	2014-02-05
126	보 누수막고 제방 다시 쌓고…4대강 여전히 보수공사	2014-03-24
127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성 의문에도…환경부, 환경평가 조건부 승인하기로	2014-06-12
128	이자 연 3200억 세금으로 갚아도 4대강 빚 원금 6조는 ‘막막’	2014-07-07
129	낙동강 주변 기온 하락에도 수온은 올라	2014-07-16
130	4대강 자전거길 안전 주의	2014-08-20
131	MB표 자전거도로사업 대폭 축소	2014-10-03
132	4대강 2차공사 절반이 담합…1400억 국고손실	2014-11-10
133	‘MB 자원외교’ 국조 합의…4대강은 불발	2014-12-11
134	작년 보수한 ‘공주보 다리’ 또 균열	2014-12-31
135	MB “4대강사업 앞으로 하자 보수하면 된다”	2015-01-02
136	4대강사업 탓 추가 공사…법원 “국가가 보상하라”	2015-02-27
137	‘가뭄에 무용지물’ 4대강 물… 끌어다 쓰려 수천억 또 투입	2015-06-17
138	국회예산정책처 “4대강 생태하천사업 경제성 부풀려져”	2015-09-05
139	충남 가뭄용 급수 알고보니 금강 물	2015-10-28
140	공주보~예당호 수로사업 ‘예타’ 않기로	2015-12-02

<경향신문>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	대운하 반대 총선 낙선운동 나선다	2008-02-04
2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대운하 추진	2008-05-24
3	힘 받는 대운하 포기론	2008-06-11
4	대운하 전위조직 띄운다	2008-11-29
5	4대강 정비 4년간 14조 투입	2008-12-16
6	대운하 반대 단체 다시 뭉친다	2008-12-18
7	4대강 사업 실체는 대운하	2008-12-23
8	대운하 양심선언 결국 징계	2008-12-25
9	4대강 사업 기공식 강행	2008-12-29
10	4대강에 16개 수중보 설치 운하 전단계 아니냐 논란	2009-04-28
11	대운하보다 커진 4대강	2009-06-09
12	도시축전서 4대강 홍보 강요	2009-07-03
13	여, 4대강 예산 논란 확산	2009-08-13
14	민주 4대강 국정조사 추진	2009-09-08
15	4대강 분할 발주 금지 지방 건설사 또 찬밥	2009-09-16
16	4대강 투자는 위법 수공 의견보고 묵살	2009-10-07
17	수공 8조 충당하려면 판교 8개 개발	2009-10-12
18	취업 절박한 대학생 불러 4대강 홍보	2009-10-27
19	또 알맹이 빠진 4대강 예산안	2009-11-19
20	4대강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2009-11-28
21	4대강 공사 유역서 문화재 첫 발굴	2009-12-10
22	4대강 담합조사 하는 둥 마는 둥	2009-12-25
23	예산 날치기로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2010-01-04
24	4대강 침수 피해 축소 의혹	2010-02-03
25	국토연구원 4대강 난개발 우려	2010-02-24
26	발암가능물질 20배 초과	2010-03-03

	기사 제목	보도 일자
27	영산강은 어머니 같은 존재 4대강 사업은 죄악	2010-03-08
28	4대강 사업 저지…손잡은 4대 종단	2010-03-16
29	민주 4대강 저지, 예산 교육 복지에 쓰자	2010-03-22
30	작가들 4대강 저지 나선다	2010-03-27
31	4대강사업 반대 신부 강연 평화방송, 방영 취소 논란	2010-04-13
32	강은 흘러야 합니다	2010-04-20
33	4대강 순례 시민들 행렬 이렇게 파괴됐을 줄이야	2010-04-26
34	4대강본부, 팔당 유기농단지 수용 강행	2010-04-30
35	독일 이자르강엔 정부가 말한 보 없어	2010-05-05
36	명동성당 20여년 만에 시국 미사	2010-05-10
37	환경파괴 무서운 속도로 진행	2010-05-12
38	한나라 불리한 4대강 세종시 쏙 빼	2010-05-17
39	보 설치땐 수질 개선 하류는 더 악화될 것	2010-05-21
40	4대강 유역 문화재 발굴 보전 눈 가리고 아웅	2010-06-01
41	각계 4대강 저지 행동 통일	2010-06-10
42	4대강 엉터리 모형 만들어 모의실험	2010-06-17
43	보 건설방식 미국선 30년전 폐기… 4대강 홍수위험 키워	2010-06-25
44	구미보 불안 불안 부실시공 논란	2010-07-03
45	167㎜ 비에 합천보 수몰 … 준설토 오탁방지막 쓸려가	2010-07-19
46	이포 함안보 농성 지지 국내외 확산	2010-07-28
47	국토부 일부 언론 자의적 해석 찬성 선회 충남도, 해명자료 배포 사태수습에 진땀	2010-08-05
48	MB 대운하 포기 선언 석달 뒤 비밀조직 가동	2010-08-17
49	지금이라도 중단 31.4% 규모 축소 32.4%	2010-08-23
50	둑 높이기 사업대상 저수지 96% 4대강 지천보다 수질 더 나쁘다	2010-09-07
51	4대강 남는 돈 2조원 환수않고 전용 논란	2010-09-18
52	4대강에 8조… 수공, 물값 올려 빚 갚을 건가	2010-10-08
53	물 이용 부담금도 4대강 사업에 전용	2010-10-15

	기사 제목	보도 일자
54	지방국토청, 4대강 예산 집행 4개 법 위반	2010-10-28
55	여야 지도부 낙동강 전투 본격화	2010-11-18
56	낙동강 사업 위법성 없다	2010-12-11
57	개발 지역 대폭 늘려 4대강 부동산 사업 본색	2011-01-04
58	4대강 주변 문화재 재조사 실시를	2011-02-18
59	낙동강 사업 현장 또 선박 침몰 쉬쉬 의혹	2011-04-01
60	4대강 사업비 보전 전국 투기장화 우려	2011-04-13
61	4대강 영주댐 수몰지 중금속 범벅	2011-04-26
62	4대강 공사장 안전 지적 지난달에만 294건 달해	2011-05-12
63	지천 침식으로 본류에 새 모래톱 … 준설 하나마나	2011-05-18
64	농식품부 4대강 우기 대책 은 언론대책	2011-06-14
65	4대강본부, 낙동강 구간 응급조치하고 복구 완료	2011-07-13
66	910억짜리 반쪽 도로	2011-09-26
67	4대강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2011-11-01
68	4대강 사업 물부족 해결한다더니 국토부, 이번엔 중소댐 짓겠다	2011-12-29
69	4대강 이포보서도 6~7m 균열 발견	2012-01-04
70	낙동강 사업 농지 리모델링 지연 농사 차질	2012-03-07
71	김두관 지사, 낙동강 지키기 공약 지켜라	2012-04-19
72	22조 들어간 4대강 사업 지류 공사 에 15조 투입	2012-06-12
73	두물머리 상생 대안 무시한 정부, 공사 강행 집착	2012-07-19
74	4대강 보 홍수 예방 대응 능력 떨어진다	2012-08-13
75	정부 4대강 수질 악화 알고도 공사 강행	2012-09-11
76	4대강 이자 보전비만 1조 이상 밑 빠진 수공	2012-10-05
77	온통 녹색 황토물로 변해버린 낙동강	2012-10-26
78	삼성물산 대우건설, 영주댐 설계내용 담합	2012-12-24
79	인수위 4대강 사업 점검하겠다	2013-01-10
80	4대강 반대한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원상회복'	2013-01-19

	기사 제목	보도 일자
81	바닥보호공 손상 땐 보 안전 위협 확인… 국토부 주장 뒤집혀	2013-01-21
82	4대강사업 후 낙동강 수질은 공업용수	2013-01-29
83	4대강 보 소음 피해 정부 배상 첫 결정	2013-02-27
84	4대강 사업 금강 지천 역행침식 … 농경지 유실 등 속출	2013-03-28
85	합천보 하류에 거대한 모래톱 다시 생겨… 4대강사업 왜 했나	2013-04-24
86	수공 부채, MB정부 5년간 11조원 늘어 갚을 방법 없자 물값 4대강 무관 번복	2013-06-20
87	4대강 준설 보 위치 경부운하 판박이… 뱃길 염두 보 4배로 늘려	2013-07-12
88	4대강 = 대운하 비밀 문건 MB 정부, 조직적으로 파기	2013-08-01
89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의 4대강 논란 사실상 경질	2013-08-24
90	허유만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 4대강 연구용역 수행 중립성 논란	2013-09-16
91	공산성 붕괴는 4대강 공사가 부른 관재	2013-10-12
92	이만의 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인정 못해	2013-10-16
93	늦가을에도 낙동강 녹조… 수질 악화 악순환	2013-11-05
94	환경부, 친수구역 개발 중단하라	2013-12-30
95	환경부,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1년여 조사하고도 원인 불명	2014-01-15
96	여주시 남한강 관광지 개발 무산 위기	2014-03-04
97	작년보다 빠른 낙동강 첫 녹조… 3년 연속 발생	2014-05-30
98	4대강 이후 생태 파괴 심각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공감	2014-07-02
99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 MB정부, 알고도 묵인	2014-07-09
100	4대강 자전거길,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	2014-08-20
101	4대강 녹조 보가 원인 제공 외국선 상식	2014-09-25
102	4대강, 바닥도 썩고 있다	2014-10-29
103	4대강 댐과 보 없애면 스스로 복원될 것	2014-12-13
104	4대강 담합 등 입찰제한 건설사들 사면 조치 바라며 시간벌기 꼼수	2015-01-05
105	보현산댐 입찰 담합 현대 대우 SK건설 총 100억 과징금	2015-03-10
106	경제 활성화 부각, 4대강 비판 여론 돌리기 꼼수	2015-05-26
107	물 그릇 키웠다 선전만 요란… 가뭄에 그 물 쓸 방안은 전무	2015-06-18

	기사 제목	보도 일자
108	22조 쏟은 4대강 치수 효과도 미미	2015-09-17
109	남조류 독소 검토도 않고 4대강 물 농업용수로	2015-10-29
110	4대강 사업 후 사상 첫 겨울 녹조	2015-12-29

Abstract

A Study on the Validity of Media Report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Five Daily Newspapers Related to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South Korea

Min Kyu Kim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lidity of the articles related to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reported by five major newspapers. The validity was measured by factual validity , which represents the ratio of sentences comprising facts to the total number of sentences of an article,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information sources and the number of statements by information sources quoted in the relevant articles.

The study focused on three main research themes. The first research theme was developed ba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validity of news reports according to the media?'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conducted by randomly extracting 448 articles from five major media outlets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ook Ilbo, The Hankyoreh Shinmun, and The Kyunghyang Shinmun) from 2008 to 2015.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news reports according to the media.

The second theme was led b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media reports' tone of argument?' 448 news articles were first classified by their tone of argument presented in the reports (i.e.,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and validity was measured accordingly.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news reports' tone of argument.

The third theme was guided b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news reports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project phases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respectively?' Validity was analyzed based on the progres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which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phases: pre-construction (2008 - 2010), during construction (2010 - 2012), and post-construction (2013 - 2015). Further analysis on validity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political regime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2008 - 2012)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 (2013 - 2015).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validity of the news reports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ject phases. Analysis regarding the political regime

change, on the other han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ctual validity , but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information sources and the number of statements by information sources according to the political regime change.

With regard to the conflicting viewpoints of press reports related to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validity of the news reports according to the media and the project construction phases. Although the present study is limited in scope, it is hoped that it will serve as a basis for future studies in analyzing the cause contributing to the differences in validity according to the press, tone of argument, and construction project phases.

Key words: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press reports, media reports, validity of media reports
Student Number : 2016-24410